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2007. 12

김 우 철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의 증가는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이 기업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법인세제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법인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사실에만 근거한다. 그렇지만 세부담이 일정한 가운데에서도 법인 수의 증가 혹은 기업의 소득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법인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소수 대기업의 소득 증가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가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수의 변동요인을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과 그 외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기업 차원의 접근에서는 우선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과 소득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평균 유효세율의 측정을 위해 다양한 세부담 지표들을 비교·검토하고, 법인세수와 기업 세부담의 변화 추이를 가늠해 보았다. 법인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기업 소득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우선 총계지표를 활용하여 평균적인 소득변화 추이를 검토한 후, 개별 기업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변화의 원인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 소득의 순위 및 수준에 따른 변이(transition)함수와 비모수적 추정방법(Nadaraya-Watson kernel estimator)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양극화 현상의 존재 여부와 심화 정도를 고려하였다.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 외에 법인세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 수의 증가 및 소수 대기업으로의 세수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개별 기업의 세부담은 다소 감소한 가운데, 재무구조조정 성과에 기인한 기업의 수익률 개선과 전체 법인 수의 증가 그리고 규모에 따른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와 같은 요인이 법인세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향후 법인세수의 증가 추이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우철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세미나 참가자 및 익명의 두 논평자께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통계 처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임수 연구원과 원고정리를 도와준 이현영 주임연구행정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7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황 성 현

요약 및 정책시사점

국내 기업들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 및 외국 일류기업들과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추구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기업 환경의 변화는 법인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법인세수의 변동 원인을 밝혀보고,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추이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가늠해보았다.

법인세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과 그 외의 요인들로 구분하였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법인세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을 곱함으로써 결정된다. 따라서 법인세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의 과세소득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두 가지 항목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해 보았다. 동일한 법인세부담하에서도 기업의 수익 증가는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 과세 베이스의 변화는 법인세수 변동과 매우 관련이 깊다. 개별 기업 단위의 법인세 결정 요인 이외에, 전체 법인기업의 수도 법인세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새로운 법인기업의 설립은 법인세 베이스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법인세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가 큰 몇몇 우량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법인세수의 증가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

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 8.5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가 400조원에서 810조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법인세수의 증가는 경제규모의 성장보다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수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국세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23%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의 국세 대비 비중 1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수의 증가와 더불어 법인세수의 변동성(volatility)도 크게 증가하여, 2000년대의 법인세 변동성은 1980년대에 비해 2.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먼저 법인의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법인세수가 늘어났다면, 이는 법인세제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의 세부담 변화 추이를 가늠하기 위해,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신고액 등의 총계지표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각 지표에 나타난 세부담이 유사한 수준에서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표별로 확연히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업 세부담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결손기업의 실적이 제외되어 있고 실제 납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표들에 비해 세부담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한 평균 유효세율은 1980년대 동안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25% 수준으로 상승한 뒤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18% 수준을 보이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세부담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 세부담의 하락 원인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세부담 결정요인을 명목세율,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명목세율과 이월결손금이 평균 유효세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2005년 명목세율의 인하와 외환위기 이후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증가는 평균 유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은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기업 차원의 세부담이 법인세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원인으로 기업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2.15% 수준을 유지하였고 외환위기 기간에는 -0.67%로 하락한 뒤, 2000년대에 평균 3.41%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기업의 수익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익의 개선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인지 재무활동에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영업활동에 기인한다면 미래에도 수익 증가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재무활동에 기인한다면 향후에는 현재의 소득 증가 추이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재무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영업외 손익률은 외환위기 이전 -4% 수준에서 위기 이후 -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소득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보다는 재무구조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영업외손익의 개선에 기인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총계자료가 아닌 개별 기업 자료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이 수익률 증가의 주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 등의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대비 부채 비율과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하락은 경상이익률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포인트 감소하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약 1%포인트 증가하고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경상이익률은 2.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구조 개선이 경상이익 증가의 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기업의 소득 증가가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결과라면, 이는 기업소득의 양극화 문제로 연결된다. 기업 소득의 순위 및 수준에 따른 변이(transition)함수와 비모수적 추정방법(Nadaraya-Watson kernel estimator)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양극화 현상의 존재 여부와 심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조건부 평균)를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금년도에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기업은 다음 해에 다소 낮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금년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업은 차기연도에 성과가 다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조건부 평균)의 형태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에 경상이익률 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와는 달리, 경상이익률 수준 자체의 변이 양상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미래의 경상이익률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45도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우량기업의 높은 경상이익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량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이익구조의 고착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낮은 경상이익률의 기업의 경우에도 미래 경상이익률의 개선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이익 증가가 전체 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법인세수의 증가에는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 외에 법인 수의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7년에 9만 5천개 수준이던 흑자법인의 수는 2005년에는 22만 3천개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의 증가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법인 수의 증가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 법인소득뿐 아니라 법인 수를 포함해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 수가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수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은 0.5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실적 상위 100대 기업의 소득과 법인세 납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소득 차별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법인세(또는 소득)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33%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약 64%로 1.9배 증가하였고, 2002년에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전체 법인세수의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과세표준(소득)을 기업규모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평균 유효세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세부담은 누진적이거나 또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여,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납부세액은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 증가는 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따른 법인소득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의 증가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업규모의 양극화로 인한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의 법인세수 증가 추이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법인세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외수지 개선 효과는 일정 정도 기여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재무구조 개선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진 상태로서 더 이상 부채비율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차입이자율 역시 향후에 더 이상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개별 기업 차원 외의 요인인 법인 수의 증가와 소수 우량기업의 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제상에서 유리한 혜택을 누림에 따라 법인기업의 신설뿐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법인 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2009년 이후에 동업기업(Partnership)과세제도가 실시되면 현재와 같은 법인 수의 급격한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규모의 양극화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량기업의 양호한 수익구조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법인세수의 우량기업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미래 법인세수의 안정적인 증가 추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에 기업의 이윤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기업회계의 투명화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기업회계 감독과 관련한 주요 조치들과 규정 강화가 기업의 신고소득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개별 기업의 회계 및 세무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목 차

Ⅰ. 서 론 ····· 19

Ⅱ. 법인세수 변화 추이와 결정 요인 ····· 24
1. 법인세수 추이 ····· 24
2. 법인세수의 주요 결정 요인 ····· 29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 31
1. 총계지표를 이용한 평균적 법인세부담 측정 ····· 32
가. GDP 대비 법인세 ····· 32
나.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 37
다.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 40
라. 법인세전 이익 대비 법인세 ····· 42
2. 법인세부담 결정 요인 ····· 44
가. 명목세율 변화 ····· 45
나. 이월결손제도 ····· 46
다. 법인세 감면제도 ····· 50
라. 각 결정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비교 ····· 60
3. 법인세율의 변화와 감면율 그리고 법인세수 ····· 62
가.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의 관계 ····· 62
나. 평균 실효세율과 세수 변화 ····· 69

Ⅳ. 법인의 소득 변화 분석 ····· 73
1. 사업연도 소득자료 ····· 73

2. 국민계정상의 법인소득: 영업잉여+순재산소득 ····· 77
3. 기업경영분석 자료 ····· 83
가. 기업경영분석 개요 및 타 자료와의 비교 ····· 83
나.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이익지표 추이(수준변수) ····· 87
다.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이익지표 추이
(매출액 대비 비율) ····· 92
라. 산업별 비교 ····· 96
4. 한국신용평가 자료: Kis-value ····· 99
가. 경상이익률 추이 ····· 100
나. 이자부담 추이 ····· 106
5. 실증 분석 ····· 109
가. 경상이익률과 재무구조 개선 ····· 109
나. 기업 수익률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
소득변이함수 접근법 ····· 115

Ⅴ. 법인 수의 증가와 100대 기업 실적의 영향 ····· 120
1. 법인 수의 증가 ····· 120
2.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영향 ····· 124

Ⅵ. 결 론 ····· 132

참고문헌 ····· 139

표목차

<표 Ⅱ-1> 기간별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의 증가분과 증가율 ····· 62
<표 Ⅱ-2> 기간별 법인세 징수액 증가율의 표준편차 ····· 72
<표 Ⅱ-3> 기간별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율의 표준편차 ····· 72
<표 Ⅱ-4> 국세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국제 비교 ····· 82
<표 Ⅲ-1> 기간별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증가분 및 증가율 ····· 33
<표 Ⅲ-2>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국제 비교 ····· 34
<표 Ⅲ-3> 주요국의 결손금 공제제도 비교 ····· 56
<표 Ⅲ-4> 주요 법인세 조세지출 실적 ····· 56
<표 Ⅲ-5>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 간의 단위근 검정(ADF)결과 ····· 65
<표 Ⅲ-6> 평균 명목세율 증가율과 조세감면율 증가율 간의 VECM 결과 ····· 67
<표 Ⅲ-7>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 간의 VECM 결과(lag=1) ····· 69
<표 Ⅳ-1> 기간대별 흑자기업의 사업연도소득 및 적자기업의 결손 증가율(연평균) ····· 74
<표 Ⅳ-2> 기간별 법인소득과 영업잉여 증가율(연평균) ····· 81
<표 Ⅳ-3> 기간별 GDP 대비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의 평균 ····· 82
<표 Ⅳ-4> 기간별 GDP 대비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증가율(연평균) ····· 82
<표 Ⅳ-5> 『국세통계연보』와 기업경영분석 비교(전 산업) ····· 84

<표 Ⅳ- 6> 『국세통계연보』와 기업경영분석 비교(제조업) ····· 85
<표 Ⅳ- 7> 금융·보험업의 법인세 신고액 ····· 86
<표 Ⅳ- 8> 3기간 매출액 평균증가율 ····· 88
<표 Ⅳ- 9> 3기간 평균증가율(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 가중평균 ····· 90
<표 Ⅳ-10> 3기간 수익과 비용의 평균증가율: 가중평균 ····· 92
<표 Ⅳ-11> 기간별 평균 ····· 93
<표 Ⅳ-12>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 대비 비율의 차이 ····· 94
<표 Ⅳ-13> 3기간 평균 비율 ····· 96
<표 Ⅳ-14> 연도별 표본 자료수 ····· 100
<표 Ⅳ-15> 패널회귀분석 결과 ····· 102
<표 Ⅳ-16>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 104
<표 Ⅴ- 1> 법인 수와 법인세수의 증가 ····· 121
<표 Ⅴ- 2> 법인 수와 법인세수에 대한 추정결과 ····· 123
<표 Ⅴ- 3> 조사대상 기간(6년) 동안 100위권 이내에 존재했던
기업의 빈도 ····· 126
<표 Ⅴ- 4> 납부세액 100위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 ····· 127
<표 Ⅴ- 5> 납부세액 100위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 ····· 131

그림목차

[그림 Ⅱ- 1] 법인세 징수액 및 GDP ····· 24
[그림 Ⅱ- 2] 국세 대비 법인세 및 소득세 비중 ····· 25
[그림 Ⅱ- 3]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의 증가분과 증가율 ····· 26
[그림 Ⅱ- 4] 법인세 결정 과정 ····· 30
[그림 Ⅲ- 1]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 ····· 32
[그림 Ⅲ- 2] GDP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및 징수액(t, t+1) 비교 ····· 36
[그림 Ⅲ- 3]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 ····· 38
[그림 Ⅲ- 4]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 ····· 39
[그림 Ⅲ- 5] 사업연도소득(t+1기) 대비 법인세 신고액(t+1기) 비율 ····· 40
[그림 Ⅲ- 6] 법인세 부담 지표 비교 ····· 41
[그림 Ⅲ- 7] 법인세 비용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비율 추이 ····· 43
[그림 Ⅲ- 8] 최고명목세율과 평균 명목세율 비교 ····· 46
[그림 Ⅲ- 9]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비교 ····· 47
[그림 Ⅲ-10] 사업연도소득 및 결손금 비교 ····· 48
[그림 Ⅲ-11] 결손법인 수/소득법인 수와 결손금액/ 소득금액 비교 ····· 49
[그림 Ⅲ-12] 전기 결손금 및 과거 5년 평균 결손금 대비 이월결손금 비교 ····· 49
[그림 Ⅲ-13] 법인세 조세지출액 및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 ···· 51

[그림 Ⅲ-14] 조세감면 항목별 비율 추이
(법인세 조세지출 총액=100) ····· 52
[그림 Ⅲ-15] 조세감면율의 변화 추이 ····· 53
[그림 Ⅲ-16] 각 제도의 세율인하 효과: 평균명목세율로부터 ····· 61
[그림 Ⅲ-17] 각 제도의 상대적 중요성: 평균명목세율=100 ····· 62
[그림 Ⅲ-18] 평균 명목세율(ANTR)과 감면율의 시계열 추이 ···· 64
[그림 Ⅲ-19] 평균 명목세율(ANTR)과 감면율의 scatter plot ····· 64
[그림 Ⅲ-20]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비교 ····· 70
[그림 Ⅲ-21] GDP 대비 법인세와 사업연도소득 ····· 72
[그림 Ⅳ- 1] 흑자기업의 사업연도소득 및 적자기업의
결손의 추이 ····· 73
[그림 Ⅳ- 2] 산업별 수입금액 증가율 ····· 76
[그림 Ⅳ- 3] 산업별 과세표준 증가율 ····· 76
[그림 Ⅳ- 4] 국민계정의 구조와 분류체계 ····· 78
[그림 Ⅳ- 5]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비교 ····· 80
[그림 Ⅳ- 6] 법인소득 증가율과 영업잉여 증가율 ····· 80
[그림 Ⅳ- 7] GDP 대비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비교 ···· 81
[그림 Ⅳ- 8]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의 증가율 ····· 82
[그림 Ⅳ- 9] 이익 지표 비교 ····· 87
[그림 Ⅳ-10]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 ····· 88
[그림 Ⅳ-11]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경상이익 ····· 89
[그림 Ⅳ-12]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 90
[그림 Ⅳ-13]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외환차익, 기타수익 추이 ····· 91
[그림 Ⅳ-14]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외환비용, 기타비용 추이 ····· 91
[그림 Ⅳ-15]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 93
[그림 Ⅳ-16] 자본 대비 부채비율 ····· 95
[그림 Ⅳ-17] 부채 대비 이자비용 ····· 95
[그림 Ⅳ-18] 경상이익의 산업별 비중 ····· 97

[그림 Ⅳ-19] 영업손익 비중 ····· 97
[그림 Ⅳ-20] 영업외손익 비중 ····· 98
[그림 Ⅳ-21] 이자손익 비중 ····· 98
[그림 Ⅳ-22]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흑자기업+적자기업) ····· 102
[그림 Ⅳ-23]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흑자기업) ····· 103
[그림 Ⅳ-24]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적자기업) ····· 104
[그림 Ⅳ-25]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흑자기업과 적자기업
비교 ····· 105
[그림 Ⅳ-26] 부채비율 ····· 107
[그림 Ⅳ-27] 이자비용/부채비율 ····· 108
[그림 Ⅳ-28]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평균
(외환위기 전과 후 비교) ····· 116
[그림 Ⅳ-29]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분산(외환위기 전, 후) 116
[그림 Ⅳ-30] 경상이익률의 조건부 평균(외환위기 전, 후) ····· 118
[그림 Ⅳ-31] 경상이익률의 조건부 분산(외환위기 전, 후) ····· 118
[그림 Ⅴ- 1] GDP 대비 신고세액의 실제값과
Fitted Value 비교 ····· 123
[그림 Ⅴ- 2] 전체 법인세수에서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 125
[그림 Ⅴ- 3] 연도별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과세표준 ····· 128
[그림 Ⅴ- 4] 연도별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 ····· 129

Ⅰ. 서 론

정부의 재정에서 법인세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인소득세와 더불어 법인세는 재정의 3대 주요 수입원으로 불리며, 안정적 세원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의 급격한 증가세로 인해 법인세의 국세 비중이 소득세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법인세의 재정적 기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법인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인세의 경제적 중요성은 각국 정부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국제조세경쟁의 흐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법인세는 세부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증대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의 촉진수단으로 인식되며,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 제공의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법인세는 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정책의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민경제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법인세수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외부적·내부적 환경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면서 법인세수가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이러한 세수 변동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법인세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을 곱함으로

써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세소득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두 가지 항목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해야만 한다. 법인세 부담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평균 유효세율은 법인세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 세부담의 책정이라는 정책목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기에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법인세부담하에서도 기업의 수익 증가는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 과세 베이스에 대한 이해 역시 법인세수 변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개별 기업 단위의 법인세 결정 요인 이외에, 전체 법인기업의 수도 법인세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새로운 법인기업의 설립은 법인세 베이스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법인세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가 큰 몇몇 우량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의 법인세수 증가를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과 그 외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는 데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법인의 평균 유효세율과 과세 베이스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각 항목에 대한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적한다. 개별 기업 단위 이외에도 법인 수의 변화와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인세수의 증가요인을 밝혀본다. 주요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의 세부담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부담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국세청 신고 자료를 중심으로 총계지표를 활용하는 거시적 측면의 접근 방법을 위주로 하여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을 측정한다. 개별 산업 단위와 개별기업 단위의 평균 유효세율 측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과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를 각각 활용한다.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재무구조의 선택에서는 경제학적인 한계 유효세율의 개념이 적절할 수 있으나, 법인세수의 크기가 세율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평균 유효세율의 개념이 유용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균 유효세율 접근 방법은 사후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액과 연도소득 신고 자료를 통해 법인의 평균 유효세율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결정방식(법인세 세무회계 기준)을 이용하여 명목세율, 조세감면제도, 이월결손제도, 그리고 감가상각제도 등이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법인의 평균적인 세부담 결정구조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평균 유효세율을 외생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의 제도적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최근의 법인세수 변동이 법인세제의 제도적인 변화와 특정한 관련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나 한국신용평가의 자료를 통한 분석은 평균 유효세율의 추이가 산업별로 또는 기업규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소득의 원천을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명목세율과 감면율 간의 경제적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그간 우리 정부가 세율 결정과 감면제도 운용에 있어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법인세 명목세율과 법인세 감면율 양자간에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공적분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위해서는 Granger의 인과관계(causality) 분석방식을 이용한다. 법인세 감면율은 조세지출 수준을 결정하고 법인세 명목세율은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조세지출을 일종의 세출이라고 간주하면 이러한 분석은 일반적인 세입·세출 인과관계 분석의 특수한 예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흥

미롭다. 분석 결과를 통해 명목세율이 높은 경우에 감면율도 높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명목세율과 감면율 중 어느 것이 다른 하나의 변화를 이끌었는지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과세소득 증가는 산업별로 또는 기업규모별로 다를 수 있기에, 경상이익의 변화를 산업별로 또는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이를 통해 법인세수 증가의 주요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과세 베이스는 개별 기업단위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전자는 매출과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후자는 기업의 이자비용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율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한신평 자료를 통해 기업 경상이익의 증가가 주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지 중 어느 것이 개선되어 나타난 것인지를 분석하고, 영업외수지의 개선 정도는 이자율과 부채비율 어느 것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의존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경영분석과 한신평 자료로부터 제공되는 전체 또는 평균적인 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지 또는 부채비율 등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법인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확히 판별해 내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보다 설득력 있는 결론의 도출을 위해서는 실제 개별 기업 자료를 통해서 법인소득 변화 요인을 추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신평의 개별 기업 자료를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외환위기를 전후로 자기자본비율의 개선과 차입비용(이자율)의 감소가 개별 기업 차원의 경상이익률에 실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법인소득의 양극화가 최근의 법인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기업소득의 양극화 경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경상이익률의 변이(transition)함수 추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개별 기업 경상이익률의 변이함수가 외환위기 전과 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의 고착화가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 외에도 법인의 수가 증가하거나, 소수 우량 기업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법인세수는 늘어날 것이다. 개별 기업의 세부담이 일정한 가운데 전체 법인의 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법인세수는 증가할 것이다. 법인 수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설명변수로 법인 수를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법인 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 소수 대규모 기업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국세청 실제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우량기업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여 한계 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소득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법인세수의 증가가 소수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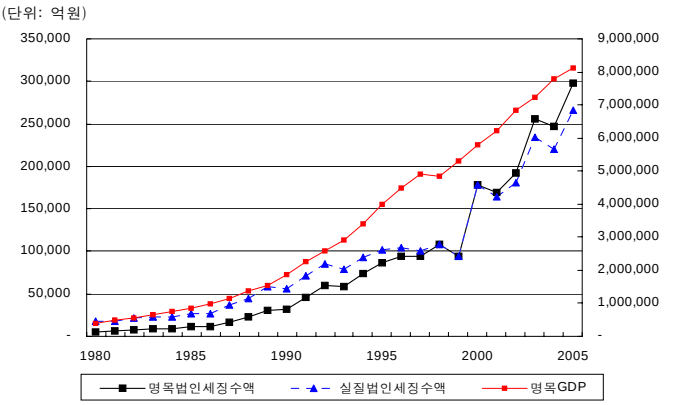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검토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먼저 최근의 법인세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라면 미래의 법인세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멈추거나 오히려 감소하여 이전의 비중으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산업의 이윤 증가가 전체 법인세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산업의 향후 이윤 전망은 미래 법인세수 예측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이자율 현상이나 부채비율의 하락과 같은 재무구조 개선이 기업소득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면, 현재의 법인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으나, 이전과 같은 급격한 신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인 수의 증가 또는 기업소득 규모의 양극화로 인해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이라면, 이는 미래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Ⅱ. 법인세수 변화 추이와 결정 요인

1. 법인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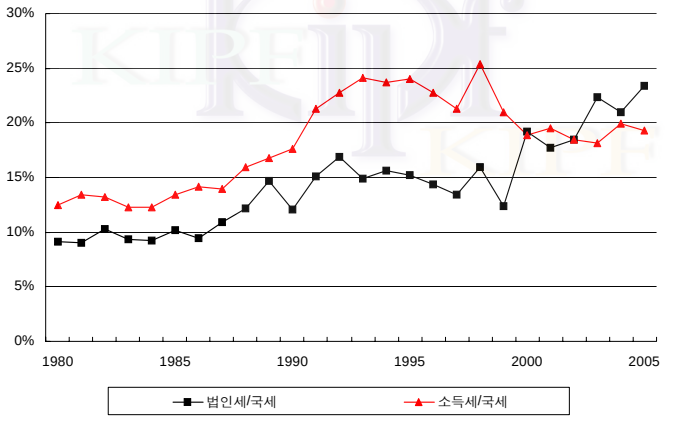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에는 8.5조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2005년에는 29.8조원 규모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에 명목 GDP가 400조원에서 810조원으로 약 2배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하면 법인세수의 증가가 경제규모의 성장보다도 더욱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수의 추이는 [그림 Ⅱ-1]에 나타나듯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 들어서며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전년 대비 90%, 33%가 증가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Ⅱ-1] 법인세 징수액 및 GDP



이러한 법인세수의 증가는 재정수입 측면에서 법인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2000년 이전에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약 1.5배 정도 큰 상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주된 재정수입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2000년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9% 수준으로 비슷해진 이후,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다. 최근 2005년에는 법인세가 국세 수입의 23%를 담당하게 된 반면, 소득세는 단지 국세 수입의 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2] 국세 대비 법인세 및 소득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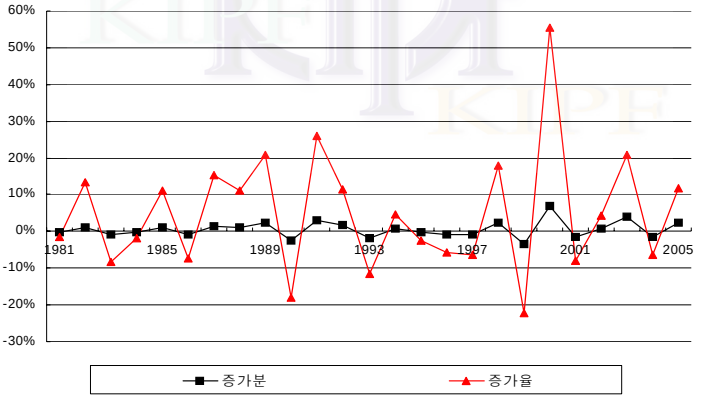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과거에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 동안 5.48%포인트 증가하여 증가율로는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0.23%포인트 감소하고, 외환위기를 포함하는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2.02%포인트

감소하여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999년에 12% 수준이었던 법인세의 비중은 2005년까지 2배 규모인 23%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표 II-1> 기간별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의 증가분과 증가율

	1981~1989년	1989~1996년	1996~1999년	1999~2005년
증가분(%P)	5.48	-0.23	-2.02	11.00
증가율(%)	59.82	-1.60	-14.05	99.90

[그림 II-3]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의 증가분과 증가율



최근 법인세수의 증가 및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더불어 법인세수의 변동성도 크게 늘어났다. 법인세 징수액 증가율의 기간대별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1980년대에는 13.51% 수준으로 법인세 징수액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2000년대에는 35.42%로 1980년대에 비하여 약 2.7배 정도 변동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율의 표

준편차도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II-2> 기간별 법인세 징수액 증가율의 표준편차

(단위: %)

	전체 기간	1981~1989년	1989~1996년	1997~1999년	1999~2005년
표준편차	21.40	13.51	16.21	11.78	35.42

<표 II-3> 기간별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율의 표준편차

(단위: %)

	전체 기간	1981~1989년	1989~1996년	1997~1999년	1999~2005년
표준편차	16.46	10.72	15.41	16.51	25.17

국제 비교자료에 의하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OECD국가 평균치가 1980년의 7.6% 수준에서 2004에 9.6% 수준으로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11% 수준에서 14.3% 수준으로 3.3%포인트 증가하여 OECD국가의 평균치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1].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부담을 인하해온 측면의 영향도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기준 및 국세에 포함되는 세목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1) OECD자료와 국내자료의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수치가 차이나는 것은 OECD자료에서 규정하는 국세의 범위가 우리나라의 국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OECD자료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을 국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국내자료의 수치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로 계산되어 있다.

<표 II-4> 국세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국제 비교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캐나다	11.6	8.2	7.0	8.2	12.2	9.5	10.3
미국	10.8	7.5	8.9	10.3	8.7	7.9	8.7
호주	12.2	9.4	14.1	14.8	20.2	16.7	18.2
일본	21.8	21.0	22.4	15.9	13.8	13.0	14.2
한국	11.0	11.4	13.5	12.3	14.1	15.3	14.3
뉴질랜드	7.8	8.3	6.5	11.9	12.4	13.6	15.5
오스트리아	3.5	3.5	3.6	3.5	4.8	5.1	5.4
벨기에	5.1	5.5	5.6	6.2	8.0	7.5	8.0
덴마크	3.2	4.8	3.7	4.8	6.6	6.0	6.5
핀란드	3.4	3.4	4.5	5.0	12.5	7.7	8.1
프랑스	5.1	4.5	5.3	4.9	6.9	5.7	6.3
독일	5.5	6.1	4.8	2.8	4.8	3.5	4.5
그리스	3.8	2.7	5.5	6.3	12.1	8.9	9.4
아이슬란드	2.5	3.1	2.8	3.0	3.7	3.9	3.3
아일랜드	4.5	3.2	5.0	8.5	11.7	12.9	11.9
이탈리아	7.8	9.2	10.0	8.7	6.9	6.6	6.9
룩셈부르크	16.2	17.7	15.8	17.7	17.8	19.3	15.3
네덜란드	6.6	7.0	7.5	7.5	10.1	7.6	8.2
노르웨이	13.3	17.2	9.0	9.2	20.8	18.7	22.6
스페인	5.1	5.2	8.8	5.4	8.9	9.0	9.8
스웨덴	2.5	3.5	3.1	5.8	7.5	5.0	6.3
스위스	6.4	6.8	7.6	6.6	9.0	8.5	8.6
터키	4.1	9.5	6.7	6.7	7.3	8.0	7.3
영국	8.4	12.6	9.9	8.0	9.8	7.9	8.1
OECD평균	7.6	8.0	8.0	8.1	10.1	9.3	9.6

주: 1. OECD평균은 단순평균임.
2. 국세에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1980년 이후부터 조사된 국가는 제외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 법인세수의 주요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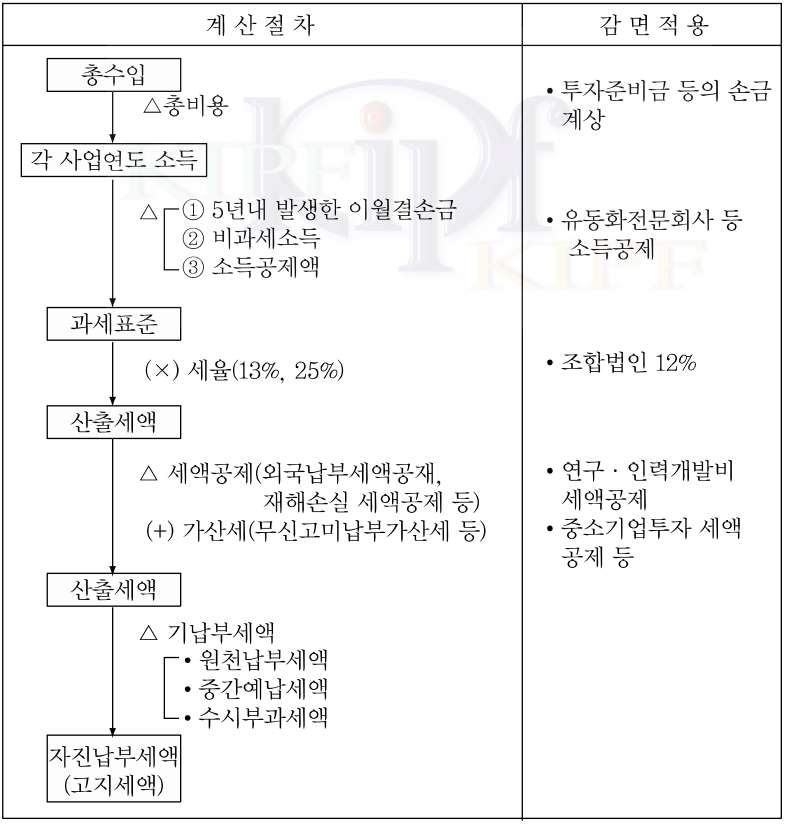
개별 기업의 법인세 결정 방식은 세무회계에 따라 우선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서부터 시작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한 후,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도출된다. 과세표준에 명목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최종적인 세액이 확정된다. 이러한 기술적인 법인세 결정 과정은 [그림 Ⅱ-4]에 잘 나타나 있다.

개별 기업의 법인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 성격에 따라 외생적인 요인, 내생적인 요인, 혼합적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외생적인 요인은 기업의 통제 영역 밖에 위치한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명목세율, 공제 및 감면율 등 세제적인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 내생적인 요인은 기업의 통제영역 내에 위치한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수입(매출)과 비용, 이익과 손실 등 기업의 영업 및 비영업(재무)활동과 관련된 요인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혼합적인 요인은 이월결손과 투자세액감면 등 수준 자체는 내생적으로 결정되지만 세제적인 영향도 동시에 받게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인세 결정 방식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하면, 결국 법인세는 외생적 요인과 혼합적 요인들이 반영된 평균 유효세율과 내생적인 요인이 반영된 과세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평균 유효세율에 대하여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에 개별 기업 차원의 자료는 평균 유효세율에 적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총계지표 차원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총계지표상의 평균 유효세율이 개별 기업의 평균적인 세부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별 기업 차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평균 유효세율의 변화 추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계지표상의 평균 유효세율은 경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경기적 요인에 대한 반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균 유효세율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불안정적일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안정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총계지표를 활용한 분석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과세소득은 기본적으로 매출 등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이익과 재무구조에 주로 의존하는 영업외손익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법인기업 수의 증가는 총계지표상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II-4] 법인세 결정 과정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6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최근에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일부에서 법인의 세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부담의 일차적인 지표인 명목법인세율은 최근 약간 감소하였으나, 과표구간과 조세 감면의 존재로 인해 명목세율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세부담의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에서는 명목법인세율 대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나 '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수' 비율 등이 실질 세부담의 대용지표로 이용되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 국가보다 낮은 명목세율을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나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법인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GDP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을 판단하기에 유용한 자료이지만 법인의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을 통해 기업의 법인세부담 증가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법인의 세부담 증가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표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장에서는 총계지표에 기초한 다양한 법인의 세부담 지표를 제안하고, 각 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세부담 지표의 여러 대안들 중에서 특히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법인세징수액/명목GDP, 법인세징수액/법인영업잉여, 법인세신고액/법인사업소득신고액 등을 주요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각 지표들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실질 세부담의 변화를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지표는 어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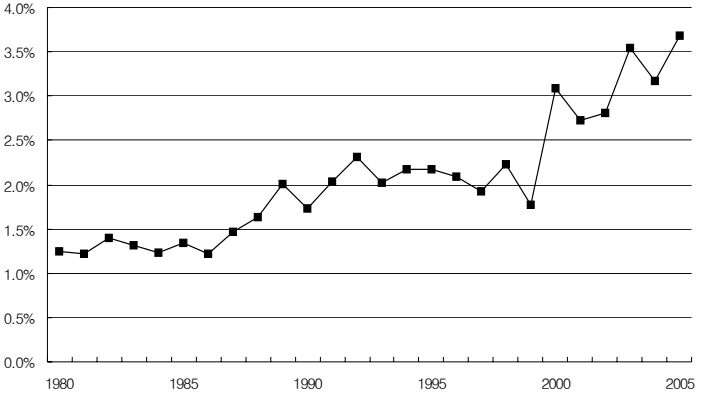
인지를 논의한다. 적절한 세부담 기준 지표가 선택되면, 이러한 법인세부담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는지를 명목세율과 이월결손 공제제도 그리고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총계지표를 이용한 평균적 법인세부담 측정

가. GDP 대비 법인세

세부담을 나타내는 총계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은 t기의 법인세를 t기의 명목 GDP로 나눈 값이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에는 통상 2~2.5% 수준이었던 법인세/GDP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0년에 3.1%, 2003년에 3.5%, 2005년에는 약 3.7%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



<표 Ⅲ-1> 기간별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증가분 및 증가율

	1981~1989년	1989~1996년	1997~1999년	1999~2005년
증가분(%P)	0.76	0.08	-0.32	1.91
증가율(%)	60.46	3.85	-15.20	107.91

우리나라의 법인세/GDP 비율은 OECD국가들의 평균치인 2003년의 3.3%, 2004년 3.4%보다도 높은 3.9%, 3.5%의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과거 2000년까지 OECD평균치를 하회하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을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은 1.6~2.9% 수준이었다. 외국의 경우 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제도 등 법인세 납부대상의 범위와 과세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GDP 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국제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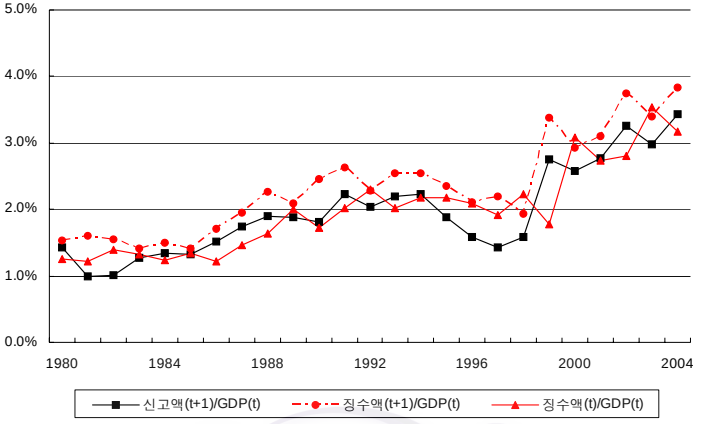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캐나다	3.6	2.7	2.5	2.9	4.4	3.2	3.4
미국	2.8	1.9	2.4	2.9	2.6	2.0	2.2
호주	3.2	2.6	4.0	4.2	6.3	5.1	5.7
일본	5.5	5.7	6.5	4.3	3.7	3.4	3.8
한국	1.9	1.9	2.5	2.4	3.3	3.9	3.5
뉴질랜드	2.4	2.6	2.4	4.4	4.1	4.7	5.5
오스트리아	1.4	1.4	1.4	1.4	2.0	2.2	2.3
벨기에	2.1	2.4	2.3	2.7	3.6	3.3	3.6
덴마크	1.4	2.2	1.7	2.3	3.3	2.8	3.2
핀란드	1.2	1.4	2.0	2.3	6.0	3.4	3.6
프랑스	2.1	1.9	2.2	2.1	3.1	2.5	2.8
독일	2.0	2.3	1.7	1.0	1.8	1.3	1.6
그리스	0.9	0.8	1.6	2.0	4.5	3.2	3.3
아이슬란드	0.7	0.9	0.9	0.9	1.4	1.5	1.3
아일랜드	1.4	1.1	1.6	2.7	3.7	3.7	3.6
이탈리아	2.3	3.1	3.8	3.5	2.9	2.8	2.8
룩셈부르크	5.8	7.0	5.6	6.6	7.0	7.4	5.8
네덜란드	2.8	2.9	3.1	3.0	4.0	2.8	3.1
노르웨이	5.7	7.4	3.7	3.8	9.0	8.0	10.0
스페인	1.1	1.4	2.9	1.7	3.1	3.1	3.4
스웨덴	1.1	1.7	1.6	2.8	4.0	2.5	3.2
스위스	1.6	1.8	2.0	1.8	2.8	2.5	2.5
터키	0.7	1.5	1.3	1.5	2.4	2.6	2.3
영국	2.9	4.7	3.6	2.8	3.6	2.8	2.9
OECD평균	2.4	2.6	2.6	2.8	3.7	3.3	3.4

주: 1. OECD평균은 단순평균임.
2. 1980년 이후부터 조사된 국가는 제외함.
3.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를 포함한 수치.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그렇지만 법인세/GDP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를 세부담의 증가로 해석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법인세/GDP 비율에 사용되는 법인세 징수액은 납기 시차의 문제로 인해 GDP와 단순 비교하는데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t년도의 법인세 징수액은 t-1년도의 사업성과를 반영하는 신고액에 대한 일부의 징수금액과 t연도 소득과 관련되는 중간예납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회계연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t년도 법인세 징수액은 t년도 GDP에 직접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세부담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세를 거시지표인 GDP에 대비시킬 때에는 경기와 보다 더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는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또한 t년도의 법인세 신고액도 전년도의 귀속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t+1년도 법인세 신고액을 t년도의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더욱 타당하다. 아래의 [그림 Ⅲ-2]에서는 법인세신고액(t+1)/GDP(t)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4년에 3.5%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GDP 대비 법인세징수액 비율이 가지는 시차에 따른 문제를 조정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GDP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및 징수액(t, t+1) 비교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또한 최근에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은 경제규모 대비 법인세수의 크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구한 값을 실질적인 법인세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개념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법인세부담의 변화 방향과 무관하게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목세율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할지라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비율의 증가하면 오히려 법인세/GDP 비율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이외에 법인세부담의 변화를 보다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총계지표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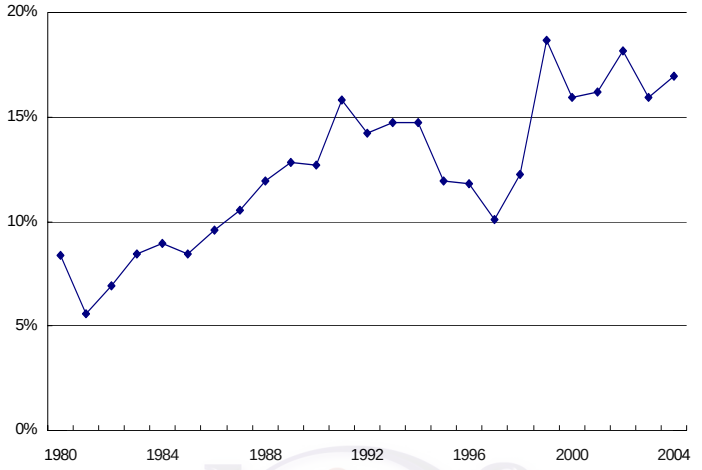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분자의 법인 신고세액은 적절하지만 분모의 GDP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GDP가 아닌 국민계정상의 법인 영업잉여를 세부담 지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업잉여는 국민계정 체계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일부 항목이다. 법인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은 영업잉여, 재산소득, 생산 및 수입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로서 이자, 임료, 기타 재산소득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의미한다. 세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비율을 구할 때에도 분자는 t+1년도의 법인세 신고액을, 분모는 t년도 법인의 영업잉여를 이용하는 것이 회계연도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은 1980년대 초반 5%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해서 외환위기 전에는 15%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했었다. 외환위기 기간 동안 10% 수준까지 떨어졌던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은 1999년에 19%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한 후 2004년 현재까지 17%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2]. [그림 Ⅲ-3]에서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의 증가가 세부담의 증가라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영업잉여는 과세소득과는 달리 이자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어 적절한 과세 베이스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2)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은 SNA1968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왔으나, 2000년부터 SNA1993 체계로의 이행작업을 시작하여 2004년 12월에 그 작업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2005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연구에서 사용한 GDP 및 영업잉여 자료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림 III-3]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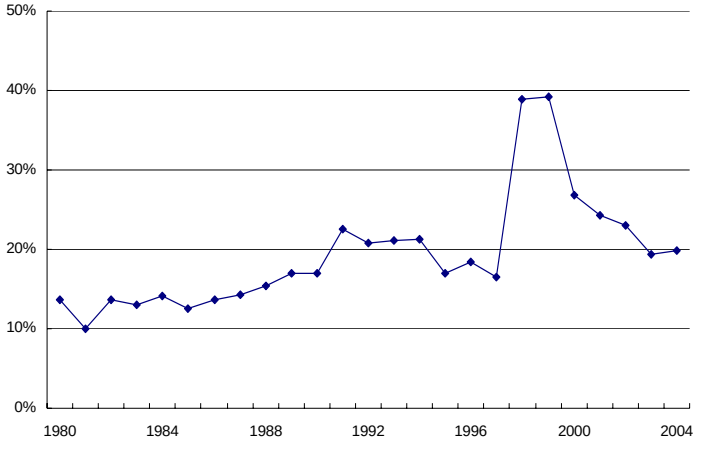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영업잉여에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수치를 세부담 지표의 분모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민소득계정 제도부문상 법인의 영업잉여는 매출과 관련된 영업이익만을 반영하고 이자비용 지급과 같은 영업외 수지는 반영하고 있지 않기에, 기업회계 및 기업의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더 바람직한 지표는 영업잉여에 순이자소득을 합한 수치이다. [그림 III-4]를 보면,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은 1980년대 초반 15%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조금씩 증가해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20% 내외의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는 동안 18% 수준까지 하락한 뒤 1998년과 1999년에 40%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한다. 이후 다시 하락하여 최근에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을 순이자소득을 고려하지 않았던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과 비교해 보면 적게는 5%포인트에서 많게는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 차이가 두 배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대부

분의 기업에서 이자수익보다 이자비용이 커서 음(-)의 순이자소득을 지니기 때문이며, 외환위기 직후 높아진 이자부담이 음(-)의 순이자소득을 더욱 크게 만들어 그 격차를 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도 결손처리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법인의 세부담 지표가 될 수는 없다. 분모인 영업잉여는 개념적으로 흑자법인의 소득에서 모든 적자법인의 손실을 차감한 전체 기업의 순이익에 해당하기에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제 이익과는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하더라도 큰 규모의 결손기업이 발생한다면 영업잉여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잠재적으로 음(-)의 소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이 지표를 세부담 측정에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의 분모는 손실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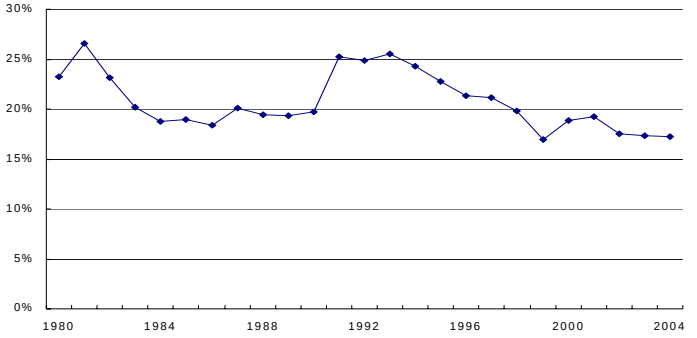
[그림 Ⅲ-4]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



다.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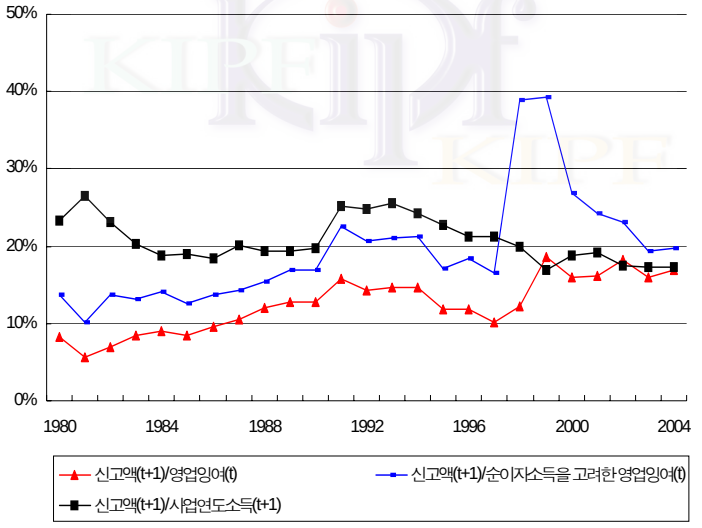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부담의 적절한 측정을 위해서는 결손기업을 제외하고 실제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소득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로는 국세청의 사업연도소득 신고자료가 개념적으로 가장 잘 부합한다. 또한 신고소득자료는 소득과 신고액이 동일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회계연도의 불일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Ⅲ-5]에서 사업연도소득(t+1)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은 1980년대 동안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25% 수준으로 상승한 뒤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기간 직후인 1999년에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은 1997년과 1998년에 발생한 대규모 결손금이 다음 해에 이월결손금에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Ⅲ-5] 사업연도소득(t+1기) 대비 법인세 신고액(t+1기) 비율



지금까지 살펴본 영업잉여,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 사업연도소득을 비교해 보면 세 지표가 큰 차이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영업잉여 대비 신고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사업연도소득 대비 신고액의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지표별 수준의 차이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며 점점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기간을 살펴보면, 사업연도소득을 활용한 지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지표들에서는 불안정적으로 급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Ⅲ-6] 법인세 부담 지표 비교



사업연도 신고소득 자료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등 세무회계에 따른 손금처리 후의 소득이므로 세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간별 비교나 국제 비교가 어려우며, 신고소득이 기업의 진정한 소득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기업의 진정한 소득에 가까운 개념으로 개별 기업의 법인세전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법인세전 이익 대비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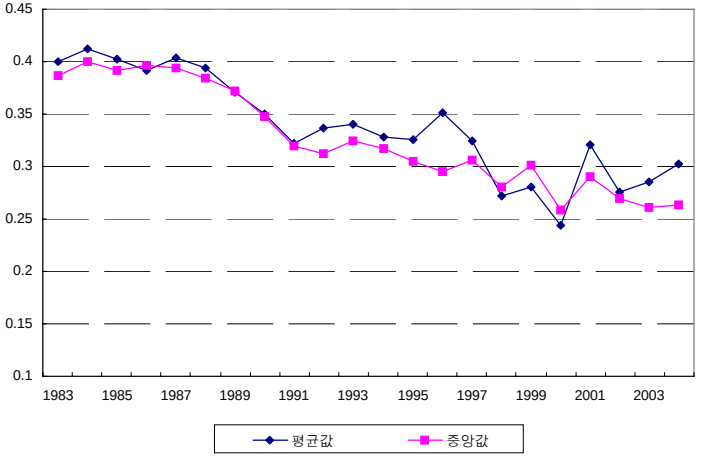
기업회계상의 순이익을 나타내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자료는 총계자료인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산업별 재무자료와 개별 기업 차원의 자료인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기업재무제표가 있다. 재무자료에 나타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세무회계상의 비용이 제외되어 기업회계상의 순이익에 가장 가까운 지표이다. 그렇지만 재무자료에서 법인세 비용은 기업회계에 의한 법인세액일 뿐, 실제 신고 및 납부한 법인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경영분석을 활용하는 세부담은 산업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명목법인세율과는 다르게 아주 산만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기간인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을 기록한 산업이 다수 존재하여 음(-)의 세부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세부담 지표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신용평가의 개별 기업 차원의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한 세부담 분석은 박기백・김진(2004)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7년 이상 연속해서 존재하는 기업 424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구하였다. 또한 법인세 비용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 비용에 이연법인세 회계를 고려해 줌으로써 실제 납부한 법인세에 근사한 수치를 법인세 비용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Ⅲ-7]에 나타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의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1983년

40% 수준인 세부담이 1991년 32%대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1996년에 35%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이를 유지하였으며,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에 직전연도에 비해 5% 이상 대폭 감소한 뒤 2000년에는 24%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후 2001년에는 32%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30% 수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박기백・김진(2004)은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자료(외감, 등록, 거래소상장, 코스닥상장 등)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외감 및 등록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아 실제 법인세 산출 시 하위 단계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기업이 다수 존재하지만 분석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세부담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III-7] 법인세 비용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비율 추이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지표들을 비교해보면, 세부담을 나타내는 가장 우수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판단된다. 각각의 지표들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지표들의 추이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세부담의 증가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평균 유효세율 관점에서 기업의 세부담을 설명하는 데 가장 근접한 지표로는 국세청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결손(손실)이 제외된 소득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세부담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단순히 총계지표가 아닌 세부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인세부담 결정 요인

법인세는 우선 사업연도소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 후 공제 및 감면세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차감해 주어 최종적인 법인세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산출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ETR = [(1 - L - N - D) \times ANTR] - E$$

단, $AETR$=법인세 신고액/사업연도소득,
L=이월결손금/사업연도소득,
N=비과세소득/사업연도소득,
D=소득공제/사업연도소득
$ANTR$ =평균 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E=감면 및 공제세액/사업연도소득

여기서 평균 유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은 법인세 신고액을 사업연도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된다. 평균 명목세율

(Average Nominal Tax Rate)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준 산출세율로서 최저와 최고 명목세율의 평균에 해당한다. 법인세가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적용받는 명목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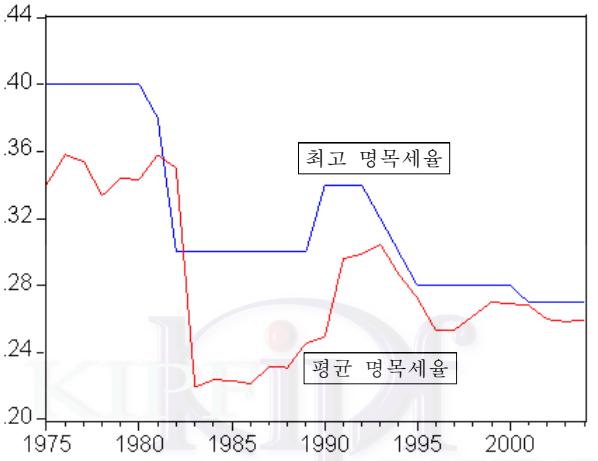
위의 식에 의해 법인세의 결정 과정을 분해하여 각각의 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도적인 변화가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가. 명목세율 변화

명목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은 1980년대 이전에는 40%를 유지하다가 1981년에 30%로 낮아진 뒤, 1990년에 34%로 다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25%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평균 명목세율은 1990년대 이전에는 명목세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며 큰 폭이 점점 줄어들며 최근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 명목세율과 최고 명목세율의 차이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978년까지는 과세표준 구간이 3단계로 구분되어 20%, 30%, 4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1980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2단계 과세표준 구간체계에 5천만원을 기준으로 25%, 4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1981년에는 22%와 38%로 세율이 낮아졌으며 1982년에는 20%, 30%로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1988년에는 세율은 변동이 없었으나 과세표준의 기준을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1990년부터는 과세표준을 1억원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며 20%, 34%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과세표준 1억원 기준은 불변인 상태에서 꾸준히 세율을 인하하여 2005년 현재 13%, 25%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최고 명목세율과 평균 명목세율의 차이는 과표구간과 다단계세율 구조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적용기업의 비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림 Ⅲ-8]

에 나타난 명목세율과 평균 명목세율은 최근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8] 최고 명목세율과 평균 명목세율 비교



나. 이월결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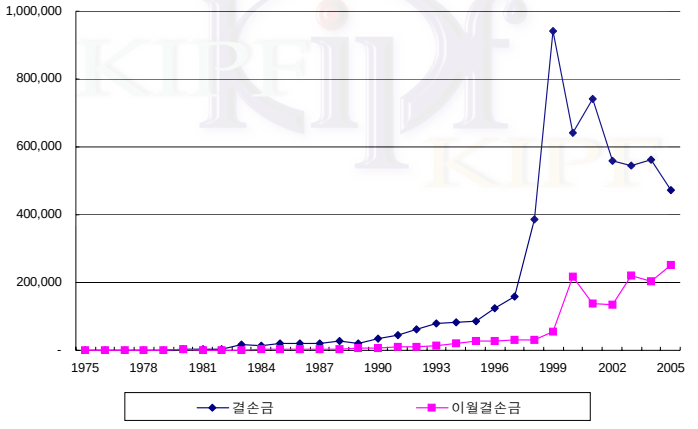
평균 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과표구간 그리고 조세감면제도와 같은 일반세제적 요인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전기의 영업손실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금기 또는 차기에 이월가능공제가 가능하여 특정연도의 평균 유효세율은 과거 및 현재의 영업성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월결손금제도는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뒤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서 먼저 발생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소급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들의 결손금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매우 낮은 수

준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에는 90조원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이후 조금씩 결손금의 규모가 줄어들며 2005년에는 약 5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결손금의 증가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금액도 점점 증가하여 2000년에 20조원을 돌파한 뒤 2005년에는 25조원 규모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로 인해 급증한 기업들의 결손금이 5년간 공제가능한 제도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월결손금공제액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Ⅲ-9]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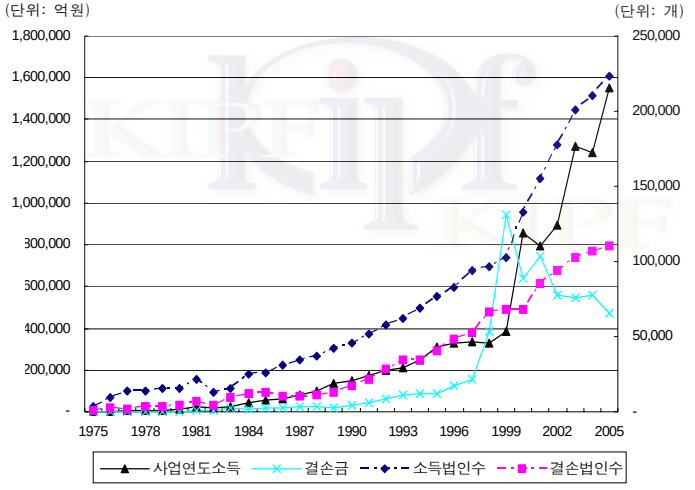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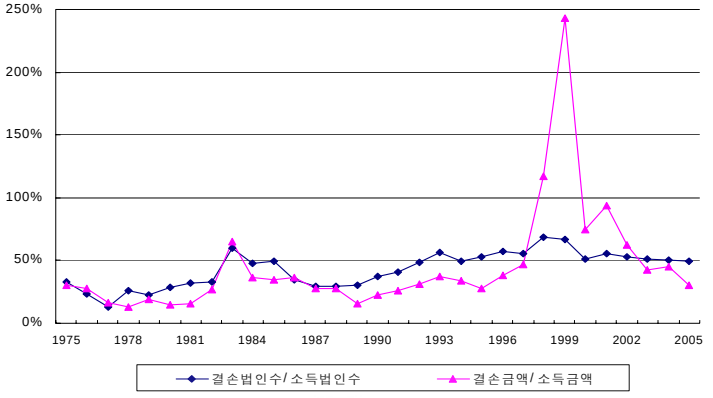
[그림 Ⅲ-10]에 나타난 사업연도 소득 및 결손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연도소득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결손금의 규모는 외환위기 동안 급증한 뒤 점차 안정적인 추세를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법인세수의 증가에 이월결손금 공제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짐작이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림 Ⅲ-12]에 나

타난 전기 결손 및 과거 5년 평균 결손금 대비 이월결손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손금의 증가속도보다 이월결손금공제액의 증가속도가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Ⅲ-11]에 나타난 결손법인 수/소득법인 수와 결손금액/소득금액 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이월결손금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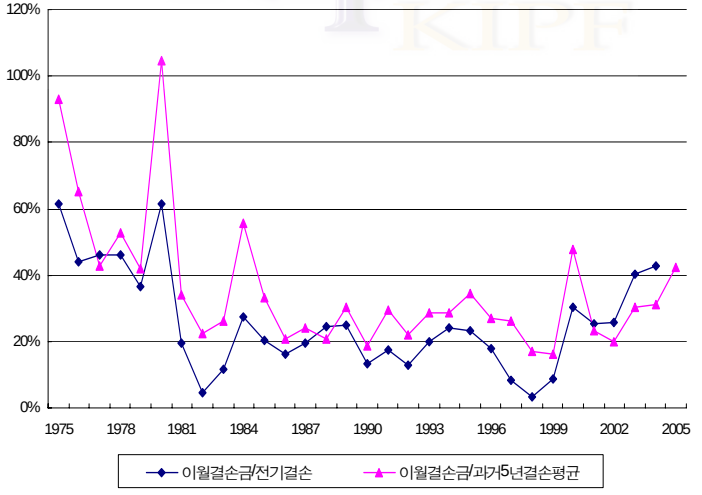
[그림 Ⅲ-10] 사업연도소득 및 결손금 비교



[그림 Ⅲ-11] 결손법인 수/소득법인 수와 결손금액/소득금액 비교



[그림 Ⅲ-12] 전기 결손금 및 과거 5년 평균 결손금 대비 이월결손금 비교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기업들이 결손을 보전해 왔지만 그 수준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림 Ⅲ-9]의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의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규모 차이가 2~3배 수준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발생한 결손을 충분히 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주요국의 결손금 공제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5년인 것에 비해 미국은 20년, 독일 및 영국은 기간에 제한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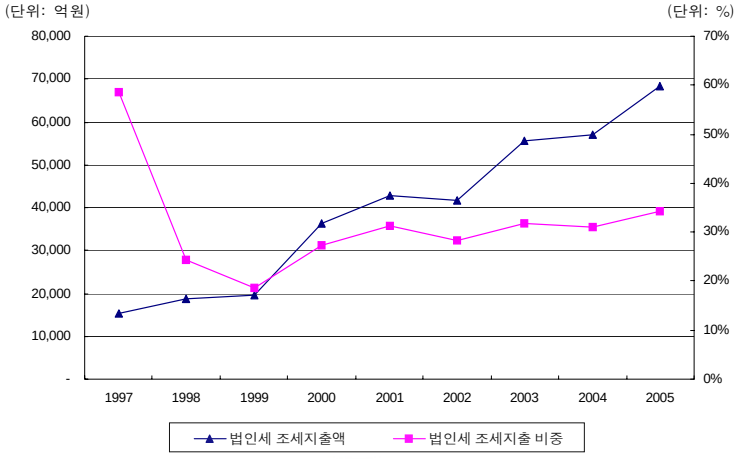
<표 III-3> 주요국의 결손금 공제제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월공제	5년	5년	20년	무제한	무제한
소급공제	1년(중소기업)	1년(중소기업)	2년	1년	3년

다. 법인세 감면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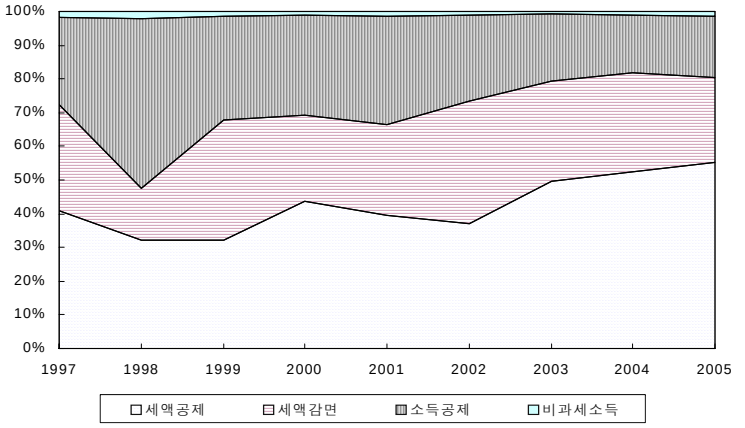
법인세의 각종 공제 및 감면의 변화를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살펴본다. 법인세 조세지출액은 조세지출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7년 1.5조원 규모였으나, 2005년에는 6.8조원 규모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조세지출액 가운데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액의 비중은 1997년 60% 수준에 달하다가 1999년 20%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속에 2005년에는 약 35%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 법인세 조세지출액 및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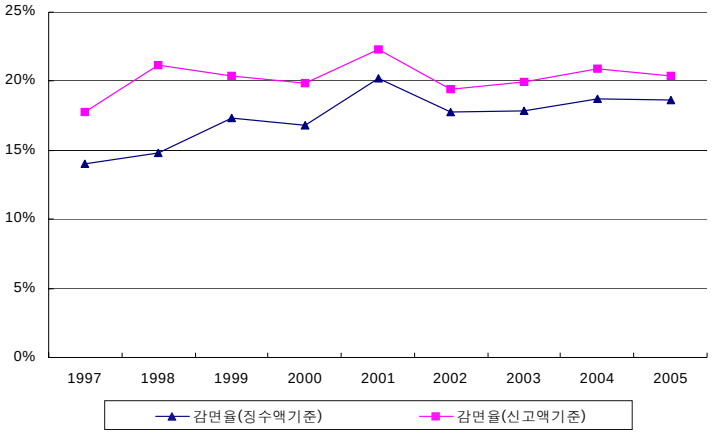
조세지출은 감면방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조세지출은 1997년에 전체 조세지출의 40%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55% 수준으로 꾸준하게 증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과세 방법으로 이루어진 조세지출은 약 1%로 내외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조세지출은 1998년에 50%의 비율을 점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1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III-14] 조세감면 항목별 비율 추이(법인세 조세지출 총액=100)



납부세액 대비 조세지출액을 의미하는 조세감면율은 신고액 또는 징수액을 기준으로 구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신고액 또는 징수액 기준 조세감면율은 둘 다 큰 변화 없이 약 18~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세지출액의 증가가 법인세 신고 또는 징수액의 증가와 같은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감면이 외형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Ⅲ-15] 조세감면율의 변화 추이



주요 감면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법인세 감면액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신고세액의 증가와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세 조세지출액이 1997년 1.5조원 규모에서 2005년에는 6.8조원 규모로 약 4.5배 증가하는 사이에 법인세 신고세액은 1997년 7조원 규모에서 2005년에는 26조원으로 약 3.7배 정도 증가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2000년 이전에는 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이 제조업에 치우쳐 있었으나, 이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 감면율을 살펴보면 거의 일정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율을 15%에서 10%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도 50%에서 40%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도 5%에서 3%로 축소시켰다. 종합해보면, 감면제도는 확대나 축소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주요 감면 항목들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8년도에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10%의 공제율로 적용되었으며

감면액은 약 600억원 규모였고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수준으로 활용도가 작았다. 1999년에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도소매업을 포함한 21개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2003년 하반기에는 15%로 공제율을 인상했으며, 1.3조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가장 큰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5년도에는 공제율을 다시 10%로 인하했지만 공제 적용대상 자산을 확대했으며, 2.5조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36%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997년도에는 제조업과 광업을 대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5%(중소기업은 15%) 가운데 선택 적용이 가능하였다. 이때에는 약 3천억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가장 큰 19.2%의 비중을 차지했다. 2001년에는 대상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단,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제외)하고 귀속시기를 지급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였다. 2003년도에는 1.1조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다음으로 큰 2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3년도에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공제한도를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로 하향 조정한 후 2004년과 2005년에는 감면액과 그 비중이 각각 0.94조원(16.5%), 0.97조원(14.3%)로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997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5개 업종에 대하여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어, 약 1,500억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10.2%의 비중을 차지했다. 2001년에는 대상 업종에 건설업 외 9개 업종을 더 포함시키고,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30%로 감면폭을 확대했다. 2002년에는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하며 7천억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가장 큰 약 17%의 비중을 차지했다. 2004년도에는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시켰으나, 2005년도에 다시 감면율을 다시 인상하여 15~30%까지 적용이 가

능하게 조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에 수도권, 비수도권의 판단기준을 본점 소재지에서 공장과 본점이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면액의 규모가 0.9조원(2003년), 0.66조원(2004년), 0.35조원(2005년)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인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7년에는 투자금액의 5%를 공제해주어 각각 900억원과 1,000억원 감면규모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6.1%와 6.9%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1년도에 공제율을 3%(중소기업 7%)로 인하한 이후 활용도가 꾸준히 하락하여 2005년도에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300억원 규모, 환경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가 1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면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중복 적용의 배제 및 수도권 적용 배제 규정이다. 2001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 배제 규정에 포함되어 다른 감면 및 공제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 내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02년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2004년도에는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감면제도들의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Ⅲ-4>와 같다.

<표 III-4> 주요 법인세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

순위	1997년			1998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948	19.23	기부금의 손금산입	3,663	19.57
2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2,386	15.5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2,010	10.74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80	13.5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999	10.68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561	10.1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929	10.30
5	환경·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1,056	6.89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254	6.70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941	6.13	보험회사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928	4.96
7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03	5.24	농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871	4.65
8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474	3.09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 불산입	837	4.47
9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463	3.0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809	4.32
1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457	2.98	환경·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685	3.66
	상위 10위 계	13,168	85.88	상위 10위 계	14,985	80.04
	상위 10위 외 계	2,166	14.12	상위 10위 외 계	3,737	19.96
	법인세감면총액	15,334	58.46	법인세감면총액	18,722	24.22
	조세지출총액	26,228		조세지출총액	77,306	

<표 Ⅲ-4>의 계속

(단위: 억원, %)

순위	1999년			2000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520	12.8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890	19.03
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2,025	10.29	기부금의 손금산입	4,417	12.20
3	기부금의 손금산입	1,891	9.61	임시투자세액공제	4,388	12.12
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671	8.4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787	10.46
5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335	6.78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2,890	7.98
6	농협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1,255	6.38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409	3.89
7	임시투자세액공제	1,153	5.86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1,386	3.83
8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993	5.05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익금 불산입	1,264	3.49
9	공공차관도입 세액감면	935	4.75	공공차관도입 세액감면	1,141	3.15
10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793	4.0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115	3.08
	상위 10위 계	14,571	74.04	상위 10위 계	28,687	79.22
	상위 10위 외 계	5,108	25.96	상위 10위 외 계	7,523	20.78
	법인세감면총액	19,679	18.6	법인세감면총액	36,210	27.26
	조세지출총액	105,419		조세지출총액	132,824	

<표 III-4>의 계속

(단위: 억원, %)

순위	2001년			2002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1	임시투자세액공제	7,025	16.3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234	17.37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426	14.97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867	16.49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4,717	10.99	임시투자세액공제	6,528	15.68
4	기부금의 손금산입	4,270	9.95	기부금의 손금산입	3,551	8.53
5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077	9.50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2,009	4.82
6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익금 불산입	2,818	6.57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972	4.7%
7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2,414	5.62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익금 불산입	1,761	4.23
8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1,946	4.5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362	3.27
9	공공차관도입 세액감면	1,208	2.8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137	2.7
10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080	2.52	농협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1,063	2.55
	상위 10위 계	35,981	83.83	상위 10위 계	33,484	80.41
	상위 10위 외 계	6,943	16.17	상위 10위 외 계	8,157	19.59
	법인세감면총액	42,924	31.26	법인세감면총액	41,641	28.28
	조세지출총액	137,297		조세지출총액	147,245	

<표 Ⅲ-4>의 계속

(단위: 억원, %)

순위	2003년			2004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1	임시투자세액공제	13,019	23.37	임시투자세액공제	17,806	31.27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1,597	20.8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423	16.55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094	16.3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617	11.62
4	기부금의 손금산입	4,083	7.33	기부금의 손금산입	4,530	7.96
5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101	3.77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3,490	6.13
6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1,798	3.23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 불산입	2,235	3.93
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547	2.78	농협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1,857	3.26
8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 불산입	1,506	2.7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755	3.08
9	농협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1,505	2.70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309	2.30
1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269	2.28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036	1.82
	상위 10위 계	47,519	85.31	상위 10위 계	50,058	87.91
	상위 10위 외 계	8,185	14.69	상위 10위 외 계	6,883	12.09
	법인세감면총액	55,704	31.82	법인세감면총액	56,941	31.14
	조세지출총액	175,080		조세지출총액	182,861	

<표 III-4>의 계속

(단위: 억원, %)

순위	2005년		
	항목	실적	비중
1	임시투자세액공제	24,577	35.94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754	14.26
3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5,446	7.96
4	기부금의 손금산입	5,295	7.74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542	5.18
6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불산입	3,226	4.72
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242	3.28
8	농협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2,136	3.12
9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906	2.79
1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258	1.84
	상위 10위 계	59,382	86.84
	상위 10위 외 계	8,997	13.16
	법인세감면총액	68,379	34.16
	조세지출총액	200,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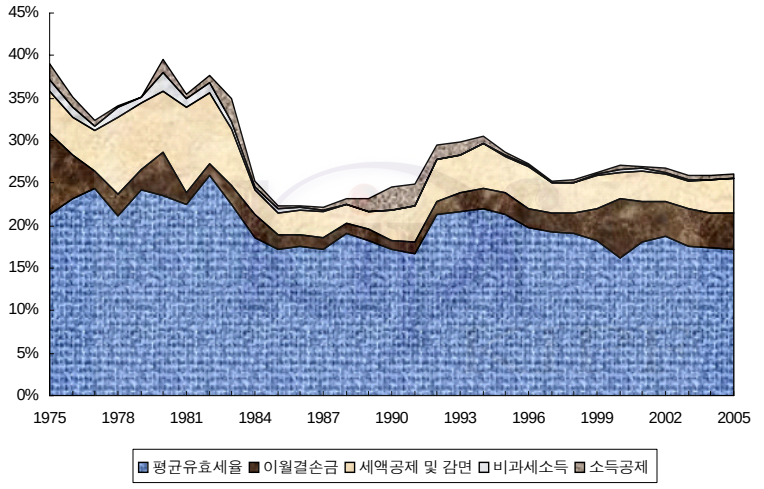
라. 각 결정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비교

본장의 첫 부분(p. 44)에서 소개한 법인세 산출 방식에 의거한 평균 유효세율을 평균 명목세율(Average Nominal Tax Rate)에 대해 풀어 쓰면, 다음 식을 얻는다.

$$ANTR = AETR + (L \times ANTR) + (N \times ANTR) + (D \times ANTR) + E$$

위의 식을 통하여 이월결손 또는 각 감면제도가 평균 명목세율을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계산함으로써 각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할 수 있다. 평균 유효세율(AETR)은 평균 명목세율(ANTR)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양자간에 안정적인 장기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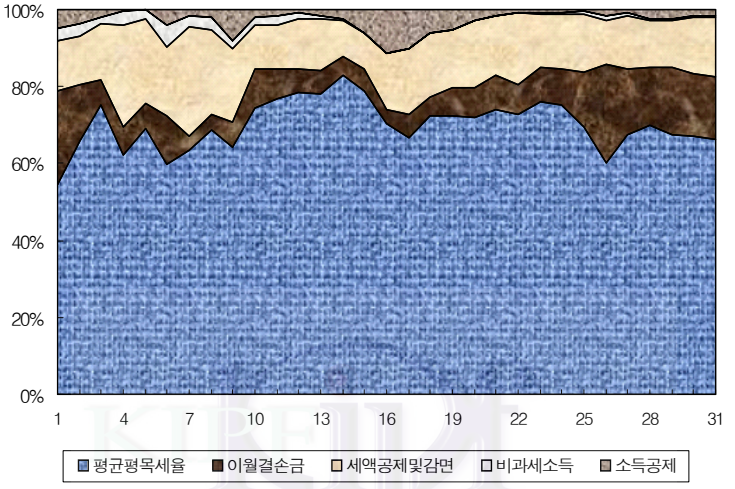
[그림 Ⅲ-16] 각 제도의 세율인하 효과: 평균 명목세율로부터



즉, 조세감면의 존재로 인해 명목법인세율의 변화 방향이 평균 유효세율의 변화 방향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조세감면율의 안정성으로 인해 명목법인세율의 변화는 방향과 크기 면에서 평균 유효세율의 변화로 일정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 평균 명목세율 대비 각 요인별 세율인하 효과를 나타낸 [그림 Ⅲ-17]을 보면, 과거에는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반면, 최근에는 이월결손제도의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크게 증가했던 결손이 최근까지 이월결손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는 최근에 거

의 무시될 정도로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7] 각 제도의 상대적 중요성: 평균 명목세율=100



3. 법인세율의 변화와 감면율 그리고 법인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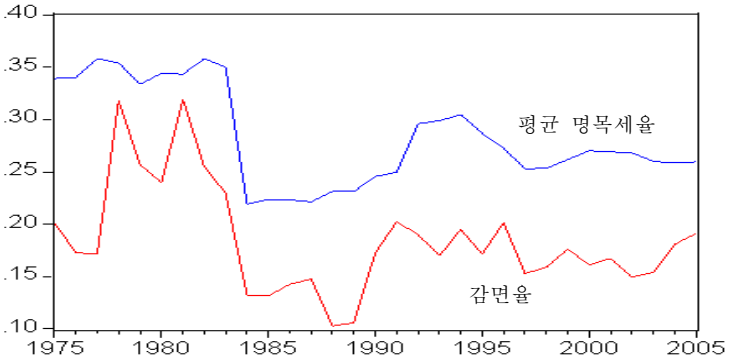
가.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의 관계

본절에서는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산출세액으로 나눈 법인세 감면율과 평균 명목세율(ANTR) 간에 어떤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법인세의 세율과 감면율의 결정과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의 변화는 수 년 동안 변화하지 않다가 대규모의 세제개편이 필요할 때 인상 또는 인하되는 반면, 감면제도의 세부 규정은 거의 매년 일정한 폭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에서 곧잘 발견된다. 여기서는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자의 변화에 특정한 체계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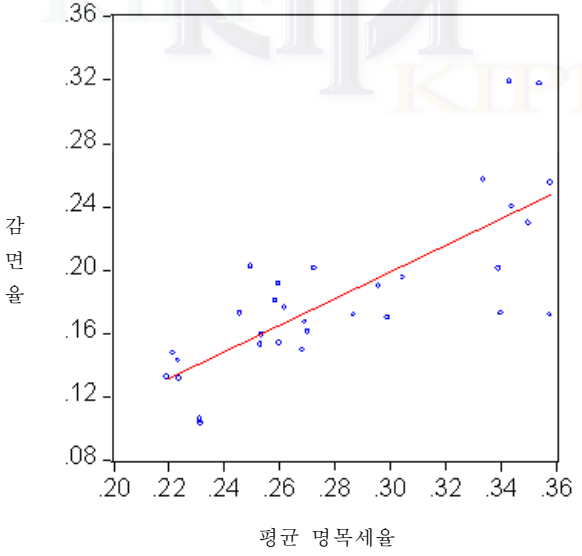
이를테면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이 상승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율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정부가 중시하는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 보자면, 양자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법인세 세율의 인하는 일정한 정도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기에 감면의 폭도 동시에 또는 직후에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인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감면의 수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완화의 필요에 따라 큰 폭의 감면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간의 시계열적 추이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Ⅲ-18]과 같다. 그림에 따르면, 전체 기간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양자 사이의 관계를 일별할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초반까지 매우 높은 세율과 매우 높은 감면율이 공존하였고,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매우 낮은 세율과 매우 낮은 감면율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다시 높은 세율과 높은 감면율의 관계가 발견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법인세율과 감면율이 모두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계열적으로 볼 때 양자 사이에 대체로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를 좀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을 scatter plot을 통해 대비시킨 것이 다음의 [그림 Ⅲ-19]이다. 이를 통해서 양자 사이의 정(+)의 관계는 더욱 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8] 평균 명목세율(ANTR)과 감면율의 시계열 추이



[그림 III-19] 평균 명목세율(ANTR)과 감면율의 scatter plot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특성(stationarity)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앞의 그림을 살펴보면,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모두 부분적으로는 다소 불안정한 변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변수가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인지를 먼저 검정한다. 아래의 <표 Ⅲ-5>는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결과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은 모두 단위근을 갖는 불안정적(Integrated of order one) 시계열 자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5>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 간의 단위근 검정(ADF)결과

	평균명목세율	△평균명목세율	감면율	△감면율
ADF test statistics	-1.8176	-5.0153*	-2.5952	-6.3942*
Prob	0.3651	0.0003	0.1050	0.0000
Test Critical Value 1% level	-3.6701	-3.6793	-3.6701	-3.6793
Test Critical Value 5% level	-2.9639	-2.9677	-2.9639	-2.9677
Test Critical Value 10% level	-2.6210	-2.6229	-2.6210	-2.6229

주: 1. test statistic(p-value): MacKinnon(1996) one sided p-value.
2. In ADF, lag length chosen: automatic based on 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
3. *: H0(the presence of unit-roots) is rejected at the 5% significance level.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모두 단위근을 갖는 불안정적 시계열 자료이기에, 양자 사이에 장기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공적분 검정을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5% 신뢰수준하에서,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정(+)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차가 1인 경우: 평균명목세율 = 0.995×감면율 - 0.096
시차가 2인 경우: 평균명목세율 = 0.865×감면율 - 0.118

장기적으로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외에도, 양자가 단기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단기적으로 양자간에 특정한 방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정부의 법인세제 운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법인세율이 법인세 수입의 주요 결정요인이고 법인세 감면율이 전체 세출의 일부인 법인세의 조세지출 부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법인세율과 감면율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일반적인 세입-세출 인과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감면율 가설은 Friedamn(1978)과 Buchanan and Wagner(1977, 1978)의 세입-세출 가설(tax-spend hypothesis)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법인세율의 변화가 법인세 조세지출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주장은, 제도적인 이유로 인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순수입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법인세율이 법인세 조세지출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법인세 정책의 주요 고려가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편의에 기초하는 경우에 법인세율로부터 감면율로의 인과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금기의 법인세입 증가가 다음 기의 법인세 조세지출 증가로 연결되는 경향이 존재하게 만든다. 이러한 가설의 검정을 위해, 이하에서는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의 변화가 감면율의 변화를 유도하는지, 아니면 감면율의 변화가 법인세율의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두 변수는 불안정적인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지니며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기에, 그랜저 인과관계의 여부는 다음의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먼저 다음의 <표 Ⅲ-6>은 시차를 2로 설정한 경우의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의 오차수정모형(VECM) 추정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의 오차수정모형(VECM) 추정결과 Ⅰ : 시차가 2로 설정된 경우

$$\triangle TR_t = \underset{(0.47)}{0.11}\triangle TR_{t-1} \underset{(-0.57)}{-0.12}\triangle TR_{t-2} \underset{(-0.16)}{-0.03}\triangle TXREDR_{t-1}$$

$$\underset{(1.21)}{+0.18}\triangle TXREDR_{t-2} \underset{(-1.06)}{-0.3}EC_{t-1}$$

$$\triangle TXREDR_t = \underset{(-0.62)}{-0.22}\triangle TR_{t-1} \underset{(-1.25)}{-0.41}\triangle TR_{t-2} \underset{(0.96)}{+0.26}\triangle TXREDR_{t-1}$$

$$\underset{(0.50)}{+0.11}\triangle TXREDR_{t-2} \underset{(3.01)}{+1.26}EC_{t-1}$$

$$EC_t = TR_t \underset{(-14.1)}{-0.86}TXREDR_t \underset{(-10.2)}{-0.11}$$

<표 Ⅲ-6> 평균 명목세율 증가율과 조세감면율 증가율 간의 VECM 결과

i) 공적분 관계

TR = 0.865TXREDR - 0.118,
EC(오차수정항) ≡ TR - 0.86TXREDR - 0.118

ii) VECM 모형 추정 결과

	금기의 평균 명목세율 증가율(△TR)	금기의 조세감면율 증가율(△TRXREDR)
전기의 평균 명목세율 증가율 △TR(-1)	0.116[0.472]	-0.227[-0.628]
전전기의 평균 명목세율 증가율 △TR(-2)	-0.129[-0.577]	-0.414[-1.255]
전기의 조세감면율 증가율 △TRXREDR(-1)	-0.030[-0.165]	0.264[0.960]
전전기의 조세감면율 증가율 △TRXREDR(-2)	0.183[1.210]	0.113[0.507]
전기의 오차수정항 EC(-1)	-0.303[-1.065]	1.265 [3.015]

금기의 평균 명목세율 변화를 설명하는 식에서 전기 세율과 전기 감면율 그리고 오차수정항의 모든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감면율에서 명목세율로의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금기의 법인세 감면율 변화를 설명하는 식에서는 전기 세율과 전기 감면율의 계수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오차수정항의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오차수정항의 계수가 양(+)의 계수 값을 갖는다는 것을 해석하자면, 전기에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이 감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양자간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면, 이러한 장기적 불균형 현상이 금기의 감면율을 높임으로써 원래의 장기 균형을 복원하려는 경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사이에 존재하는 장기적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평균 명목법인세율로부터 법인세 감면율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법인세 개별 세목에서 독립적인 세입-세출 가설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정부의 법인세제 운영 방식의 결과로 법인세 조세지출(넓은 의미의 세출의 일부)은 세율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법인세 수입에 의해 제약됨을 알 수 있다.

시차를 1로 설정한 경우의 오차수정 모형의 추정 결과 또한 다음의 <표 Ⅲ-7>에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경우 역시 감면율 변화를 설명하는 식의 오차수정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지니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변수들의 계수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시차가 2로 설정된 경우의 결과와 동일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2)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의 오차수정모형(VECM) 추정결과 Ⅱ : 시차가 1로 설정된 경우

$$TR_t = \underset{(0.63)}{0.143}\,TR_{t-1} \underset{(-0.585)}{-0.092}\,TXREDR_{t-1} \underset{(-1.137)}{-0.232}\,EC_{t-1}$$

$$TXREDR_t = \underset{(-0.261)}{-0.082}\,TR_{t-1} + \underset{(0.747)}{0.164}\,TXREDR_{t-1} + \underset{(3.179)}{0.902}\,EC_{t-1}$$

$$EC_t = TR_t \underset{(-0.91)}{-0.995}\,TXREDR_t \underset{(-4.63)}{-0.096}$$

<표 Ⅲ-7>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 간의 VECM 결과(lag=1)

i) 공적분 관계

TR = 0.995TXREDR - 0.096,
EC(오차수정항) ≡ TR - 0.995TXREDR - 0.096

ii) VECM 모형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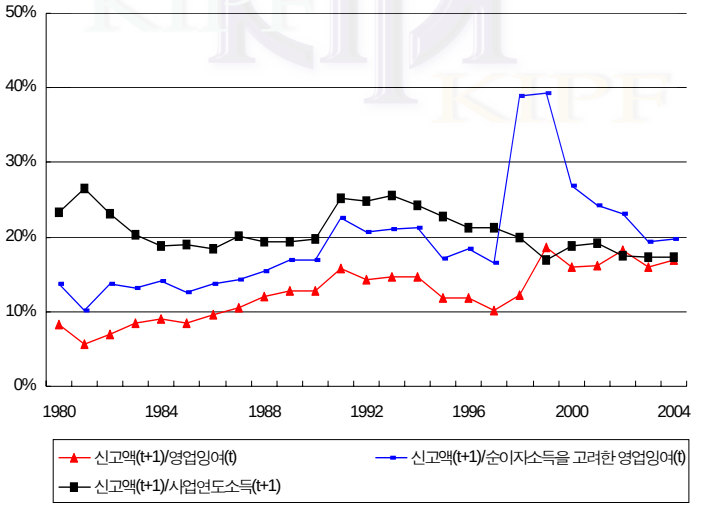
	금기의 평균 명목세율(TR)	금기의 조세감면율 (TRXREDR)
전기의 평균명목세율 TR(-1)	0.143[0.63]	-0.082[-0.261]
전기의 조세감면율 TRXREDR(-1)	-0.092[-0.585]	0.164 [0.747]
전기의 오차수정항 EC(-1)	-0.232[-1.137]	0.902 [3.179]

나. 평균 실효세율과 세수 변화

본장의 앞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의 추이는 측정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다음의 [그

림 Ⅲ-20]은 측정 방법을 달리하여 도출되는 다양한 실효세율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평균 유효세율의 정의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른 평균 유효세율의 변화 방향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영업잉여 기준의 평균 세율은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세 종류의 평균 세율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법인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의 논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림 Ⅲ-20]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비교



본장 제1절의 논의에 따라 여기에서는 국세청의 신고소득에 기초한 평균 실효세율을 기준 지표로 삼아, 2000년 이후에 관측된 법인세수의 급증이라는 현상이 일정부분 세부담(평균 유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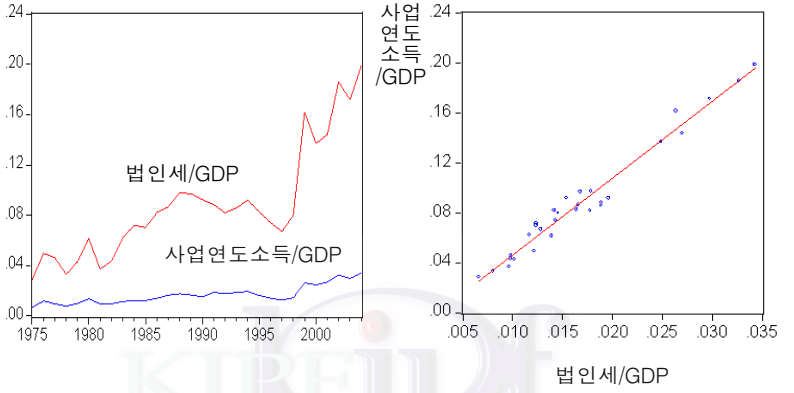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위 그림에 나타나듯이,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은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기간 직후(2000년)에 평균 유효세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은 대규모 결손금의 발생(1997년과 1998년)과 다음 해에 행해진 이월결손금 공제 처리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이 외환위기 이후 일각의 주장과 달리 조금씩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대체로 세제개편으로 인한 법인세율 하락과 관련이 깊다. 제2절 다항의 논의에서 밝혔듯이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제도는 어느 한 방향으로의 커다란 개편은 없었으며, 대체로 기존의 감면 정도가 유지되거나 다소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이후의 법인세수 급증이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을 GDP 대비 국세청 법인신고소득 비율과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의 평균 유효세율로 분해할 때,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평균 유효세율의 인상 때문이 아니라, GDP 대비 법인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양자간의 이러한 관계는 비단 외환위기 이후에만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대체로 성립한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평균 유효세율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상관계수는 -0.56에 해당하여 양자간에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GDP 대비 사업소득의 비율 간의 상관계수는 0.98로 나타나,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은 GDP 대비 사업소득 비율과 매우 강한 정(+)의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양자가 거의 선형에 가까운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계수(법인세수/GDP, 평균 유효세율) = -0.555
상관계수(법인세수/GDP, 사업소득/GDP) = 0.983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GDP 대비 사업소득의 비율 간의 강한 정(+)의 선형성은 아래 그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21] GDP 대비 법인세와 사업연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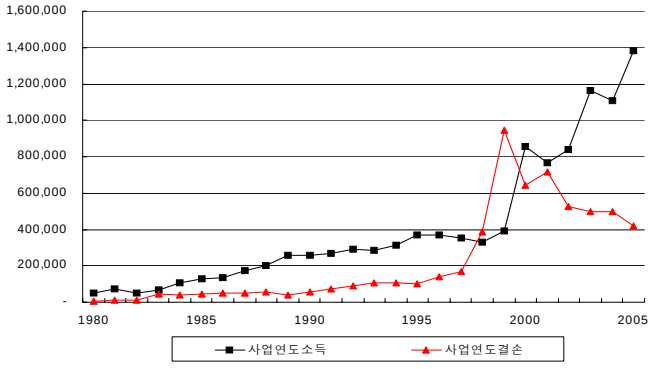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경제규모 대비 법인의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기업의 금융비용이 현저히 개선되어 경상이익률(영업이익+영업외 이익)이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많다. 이외에도 법인 수의 증가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법인의 사업소득 변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Ⅳ. 법인의 소득 변화 분석

1. 사업연도 소득자료

세부담 지표에서 사업연도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했으며, 세수변화 분석을 위해서 국세청 자료인 신고소득은 가장 신뢰성이 높은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국세청 신고소득 수준의 변화 추이를 [그림 Ⅳ-1]을 통해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흑자기업의 소득과 적자기업의 결손이 모두 천천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흑자기업의 이익 폭과 적자기업의 손실 폭이 같이 증가하는 scale effect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기간 동안 적자기업의 손실액은 흑자기업의 소득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과 결손의 총합은 외환위기 기간중 음(-)이었으나, 2000년부터 양(+)으로 반전하여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Ⅳ-1] 흑자기업의 사업연도소득 및 적자기업의 결손 추이



<표 Ⅳ-1> 기간대별 흑자기업의 사업연도소득 및 적자기업의 결손 증가율(연평균)

(단위: %)

	1981~1989년	1990~1996년	1997~1999년	1999~2005년
사업연도소득	23.98	5.56	-5.04	27.85
사업연도결손	29.75	20.52	76.04	10.85

그렇지만 신고소득 자료는 적자기업이 제외되어 있고 세무상의 법인소득일 뿐이어서 기업의 정확한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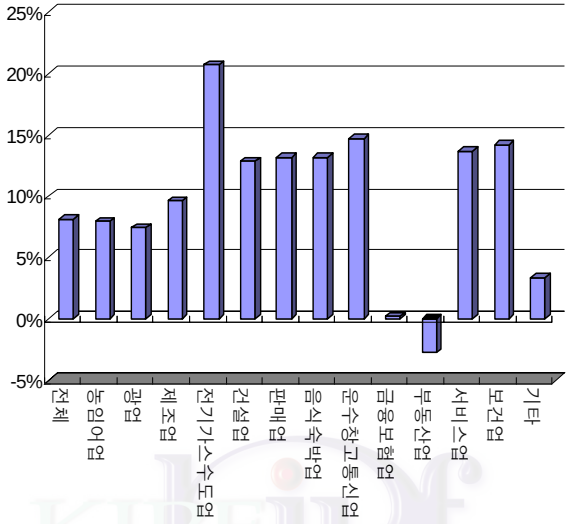
최근의 법인세수 증가 및 법인의 소득 증가에 대하여 영업외수지의 개선으로 법인기업의 신고소득이 증가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자기업의 영업외수지도 개선되어 결손의 폭도 줄어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대칭적인 효과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외에도 영업손익의 개선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고려할 것은 이익과 결손의 규모가 단기간에 동시에 확대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법인기업 수의 급증이나, 기업회계 감독 강화로 인해 회계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경우에도 가능하다. 만약 회계 투명성이나 기업 수 증가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러한 현상을 기업소득의 양극화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흑자기업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지만 적자기업의 손실 확대에 대한 경제적 설명이 필요해진다. 예를 들어 부채감소와 이자율 하락은 영업외비용을 큰 폭으로 감소시켜 영업외수지를 개선시키지만 흑자기업의 영업잉여는 영업외수입을 증가시켜, 두 가지 기업유형 간 영업외수지 차이는 벌어지며, 여기에 영업 손익의 차이가 더해져 경상이익의 차이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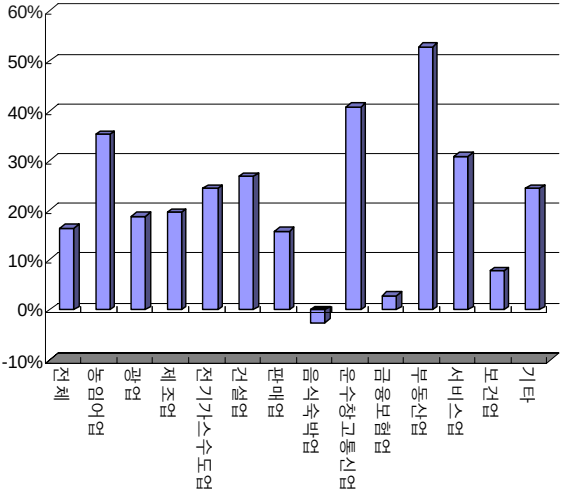
회계 투명성이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비용 축소를 위해서는 비용을 과대 계상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지만 회계감독 강화로 견제를 받은 결과일 수 있으며, 반면 적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는 약간의 손실만으로도 충분하고 과대한 손실이 회사의 운영에 큰 장애(신용 하락, 자금대부 곤란)가 될 수 있어 비용을 축소하려는 유인이 있는데, 회계 투명성 제고로 이러한 손실 은폐가 어려워진 결과일 수 있다.

신고소득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단순평균 증가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Ⅳ-2], [그림 Ⅳ-3]에서처럼 과세표준의 증가율이 수입금액의 증가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증가보다는 세무회계에 의한 조정의 결과로 인해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 수입금액은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모두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며, 전기가스수도업 및 운수창고통신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증가율은 음식숙박업만 음(-)의 증가율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은 큰 폭으로 과세표준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Ⅳ-2] 산업별 수입금액 증가율



[그림 Ⅳ-3] 산업별 과세표준 증가율



지금까지 살펴본 국세청 자료로 산업별 차이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기에는 관찰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신고 소득자료 이외에 법인의 소득 변화를 이해하기 유용한 자료로서 국민계정상의 법인부문 영업잉여 및 순재산소득,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경상소득, 한국신용평가의 개별기업 재무자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국민계정상의 법인소득: 영업잉여+순재산소득

국민계정상의 법인소득은 세무회계(여러 비용공제)나 재무회계(감가상각 고려)상의 소득과는 다르며, 법인의 실질적인 소득(경제학적 개념)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소득과 달리 영업잉여와 순재산 소득으로 구분이 가능하기에 법인소득의 증가가 어느 항목에서 주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지만 흑자기업의 소득에 적자기업의 손실이 더해진 것이기에 신고소득과는 다른 범주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국민계정은 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통계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5개의 표로 이루어진 종합계정과 3개의 제도부문별 계정, 그리고 19개의 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Ⅳ-3] 국민계정의 구조와 분류체계

국민경제는 여러 경제주체들이 제각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개별 주체인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경제활동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것을 한데 묶은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이라는 개념으로 경제주체를 구분한다. 국민계정 체계에서 제도부문은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비법인기업 포함),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등 5개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개인부문으로 묶어 4개의 제도부문에 대하여 추계하고 있다.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은 종합계정 중 '국민처분 가능소득과 처분계정'을 제도부문별로 나누어 작성한 것으로, 총부가가치 중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순부가가치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각 제도부문에 배분된 내역을 나타낸다. 또한 제도부문 간 소득이전거래를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할 뿐만 아니라 이전소득의 수취 및 지급을 모두 기록하여 각 경제주체들의 소득 발생내역과 처분내역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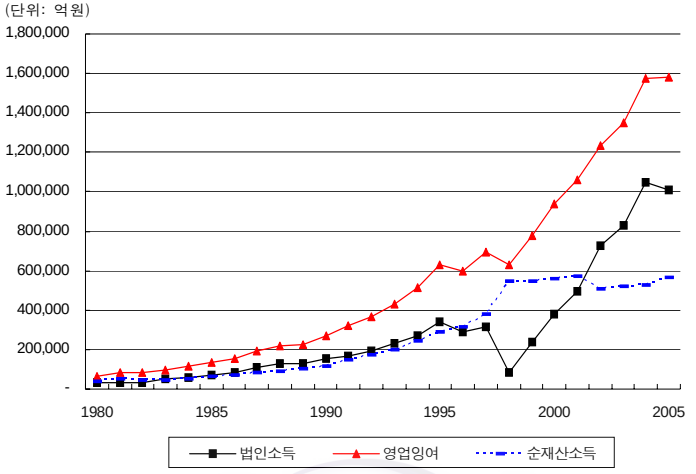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로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산, 토지, 기타 유형의 비생산자산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이자나, 임료, 기타재산소득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이다. 또한 영업잉여는 소득발생계정의 균형항목(Balancing item)으로서 부가가치에서 피용자보수와 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하고 보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에 대해 살펴보면,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법인의 소득을 나타내는 항목은 영업잉여, 재산소득, 생산 및 수입세 등의 항목이 해당한다. 재산소득은 금융자산 또는 유형 비생산자산(주로 토지 및 지하자산)의 소유주가 타 제도단위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써 수취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재산소득은 이자, 법인기업의 분배소득(배당), 임료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은 수입과 지출에 해당하는 사용과 원천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순이자소득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국민계정상의 영업잉여 및 순이자소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은 경제규모 대비 법인소득은 외환위기 이후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지, 외환위기 이후 법인소득의 증가는 영업잉여와 순재산소득 중 어느 항목에서 주로 발생했는지, 만일 순재산소득의 증가가 주요인이라면 재산소득의 구성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의 개선이 가장 중요했는지에 맞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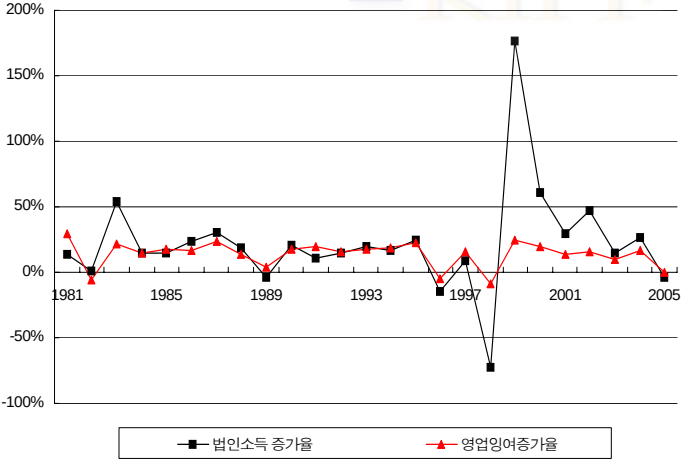
[그림 Ⅳ-5]에 나타난 외환위기 이전까지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은 비슷한 추이로 증가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며 법인소득, 영업잉여는 감소한 반면 순재산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후 순재산소득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법인소득, 영업잉여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6]에 나타난 증가율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영업잉여의 증가율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5]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비교



주: 순재산소득은 원천에서 사용을 차감한 음(-)값임.

[그림 Ⅳ-6] 법인소득 증가율과 영업잉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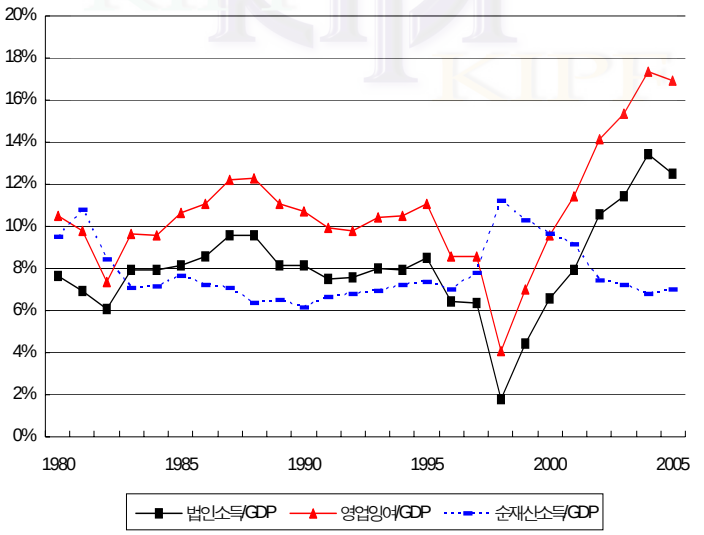
<표 Ⅳ-2> 기간별 법인소득과 영업잉여 증가율(연평균)

(단위: %)

	1981~1989년	1990~1996년	1997~1998년	1999~2005년
법인소득	18.51	13.20	-32.02	50.25
영업잉여	15.04	15.27	3.14	14.29

법인부분의 수익성 파악을 위해서는 각 항목의 GDP 대비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Ⅳ-7]에 따르면 GDP 대비 영업잉여의 비율이 외환위기 시에 4% 수준까지 하락한 뒤, 외환위기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05년에는 약 17%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그림 Ⅳ-7] GDP 대비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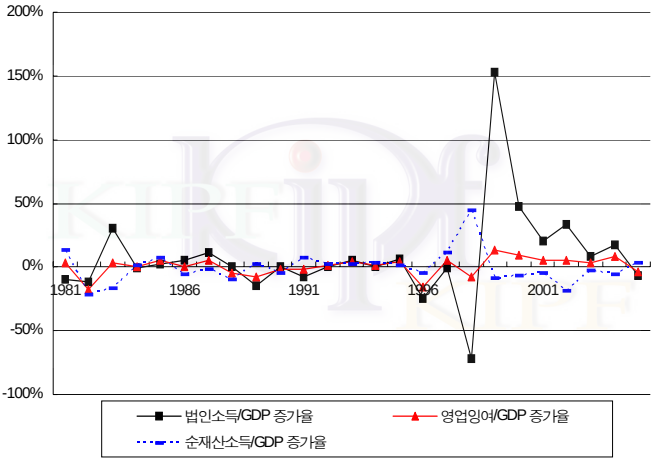
주: 순재산소득/GDP는 음(-)값임.

<표 Ⅳ-3> 기간별 GDP 대비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의 평균

(단위: %)

	1980~1989년	1990~1996년	1997~1998년	1999~2005년
법인소득	8.05	7.72	4.06	9.55
영업잉여	15.81	14.57	13.56	17.77
순재산소득	7.77	6.86	9.50	8.22

[그림 Ⅳ-8]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의 증가율



<표 Ⅳ-4> 기간별 GDP 대비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증가율 (연평균)

(단위: %)

	1981~1989년	1990~1996년	1997~1998년	1999~2005년
법인소득	1.54	-2.86	-36.52	39.00
영업잉여	-1.48	-1.06	-1.21	-6.08
순재산소득	-3.06	1.16	28.00	-6.33

국민계정상의 영업잉여와 순재산소득의 변화를 통해 흑적자기업의 모든 성과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나를 검토해 볼 수 있었으며, 국세청의 신고소득자료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순재산소득의 변화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소득 이외의 측면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3. 기업경영분석 자료

가. 기업경영분석 개요 및 타 자료와의 비교

기업경영분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i)농업·임업 ii)수도사업 iii)음식점업 iv)금융·보험업 v)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04년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 32만 7,819개 가운데 아래의 기업[3]을 제외한 6만 6,513개의 업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주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모집단에 의한 표본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자료 활용 시에 표본설계방법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층, 기업회계기준 개정 및 조사표 양식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층, 업종포괄범위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층에 유의해야 한다[4].

---

3) i) 조사대상 이외 업종(농업, 임업, 수도사업 등): 27,203개 업체
ii) 비영리법인 및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4,806개 업체
iii) 결산일이 1.1~5.31인 기업: 2,337개 업체
iv) 매출액이 25억원 미만인 영세기업: 226,960개 업체

4) - 표본설계방법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층
- 1978년까지는 단순유의추출법을 사용했으나, 이후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함
- 2005 기업경영분석부터는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에서 층화계통추출법(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으로 변경함

『국세통계연보』와 기업경영분석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기업경영분석은 2004년부터 전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대상기간이 짧다는 단점으로 인해 『국세통계연보』와 비교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표 Ⅳ-5> 『국세통계연보』와 기업경영분석 비교(전 산업)

(단위: 억원)

연도	수입금액 및 매출액			신고세액 및 법인세		
	국세통계 연보	기업경영 분석	차이	국세통계 연보	기업경영 분석	차이
2004	15,400,846	13,986,049	1,414,797	182,121	224,312	42,191
2005	17,784,045	16,105,859	1,678,186	231,021	200,757	30,264

주: 기업경영분석에서는 조사대상에서 금융업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국세통계연보』에서도 일부 산업을 제외시켰음. 그렇지만 『국세통계연보』의 산업이 세분류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기업경영분석의 전 산업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음(특히 수도사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기업경영분석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국세통계연보』에는 포함되어 있음).

그렇지만, 제조업으로 비교대상 업종을 한정하면 비교적 긴 기간을 대상으로 수입금액과 매출액 및 신고세액과 법인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는 산업별 정보에 대하여 2000년 이후부터 제공하고 있다. 수입금액과 매출액을 비교하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신고세액과 법인세 비용은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적자기업의 손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신고

- 기업회계기준 개정 및 조사표 양식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층(1990년 이후).
· 1996년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계정과목분류, 회계처리방법 및 계정과목명이 일부 변경됨.
· 1997년 환율 급등에 따라 외화 관련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 1998년 일부 계정과목이 신설 및 통합되고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됨.
- 업종포괄범위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층(1990년 이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991년과 2000년의 개정에 따라 업종분류가 조정됨.

소득은 흑자기업의 소득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Ⅳ-6> 『국세통계연보』와 기업경영분석 비교(제조업)

(단위: 억원)

연도	수입금액 및 매출액			신고세액 및 법인세		
	국세통계 연보	기업경영 분석	차이	국세통계 연보	기업경영 분석	차이
2000	5,416,264	5,394,761	21,503	59,922	71,439	11,513
2001	5,956,017	5,408,323	547,693	65,758	56,450	9,303
2002	6,655,723	6,162,097	493,625	58,408	82,875	24,469
2003	6,770,229	6,619,922	150,307	86,694	81,942	4,746
2004	7,213,728	7,720,821	507,093	90,996	132,996	41,999
2005	8,517,716	8,422,929	94,787	121,713	98,664	23,047

주: 기업경영분석의 법인세비용(주민세 10% 제외)는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한 법인세와는 차이가 존재함.

최근 법인세수 증가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및 법인세 증가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을 비교해 보면, 2006년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은 제조업의 43% 수준이며 신고세액은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의 신고세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 크게 상승했던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2000년의 3조 8천억원에서 2005년 3조 4천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에서의 세수 증가가 전체 법인세수 증가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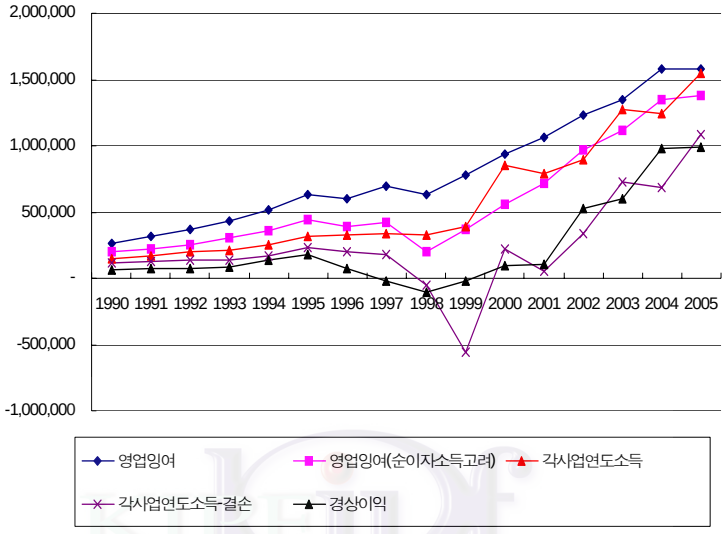
<표 Ⅳ-7> 금융·보험업의 법인세 신고액

(단위: 개, 억원)

연도	기업수	수입금액	과세표준	신고세액
2000	7,256	3,910,792	141,418	38,449
2001	6,872	4,133,118	115,800	31,503
2002	8,849	2,919,451	164,753	44,812
2003	10,263	3,345,000	163,447	42,275
2004	9,912	3,235,426	113,158	28,444
2005	10,431	3,666,395	137,849	34,783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기업의 소득(8개 산업의 경상이익 합계액)과 국민계정의 영업잉여, 『국세통계연보』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그림 Ⅳ-9]와 같다. 결손이 고려된 사업연도소득과 경상손실이 반영된 경상이익 지표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이자손익이 고려되지 않은 영업잉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법인세 납부액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소득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9] 이익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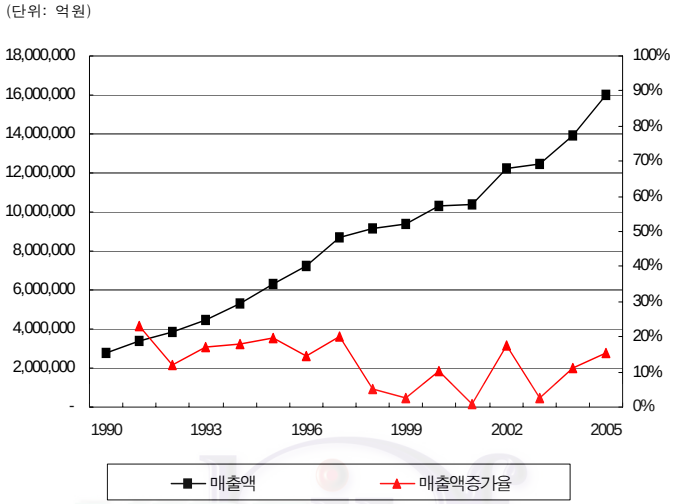


나.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이익지표 추이(수준변수)

기업경영분석을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법인소득은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중 어느 부분의 증가가 중요했는지, 영업외손익 개선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영업외손익의 개선에 영향을 준 항목은 무엇인지, 이자손익 개선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지, 경상이익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Ⅳ-10]에서 전 산업의 매출액 수준 변화를 보면 매출액의 절대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Ⅳ-10]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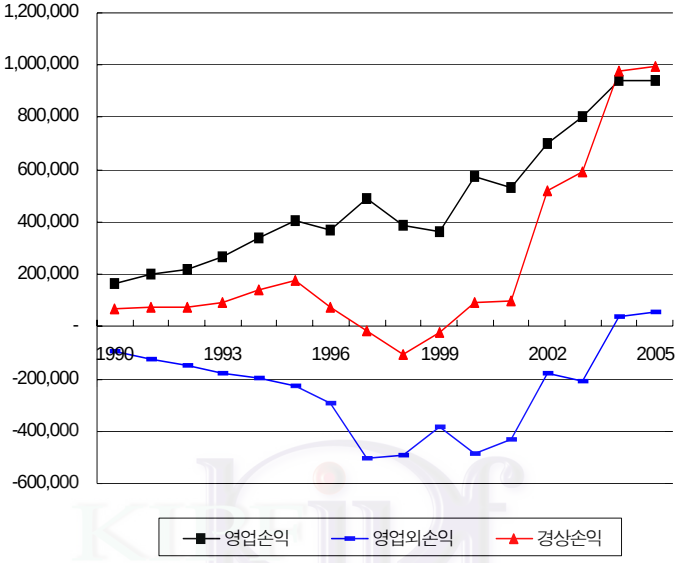
<표 Ⅳ-8> 3기간 매출액 평균증가율

(단위: %)

	1990~1996년	1997~1998년	1999~2005년
산술평균	17.4	12.5	8.5
기하평균	117	112	108
가중평균	17.2	12.3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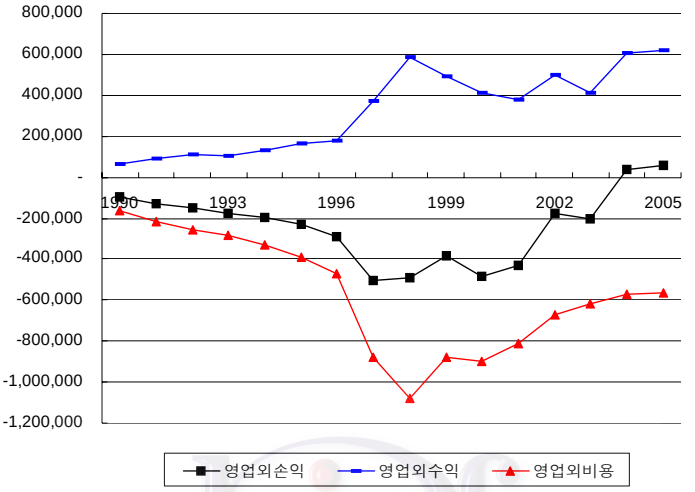
[그림 Ⅳ-11]에서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경상이익의 규모 변화를 보면, 영업손익은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영업외손실은 이전보다도 훨씬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인 경상이익은 외환위기 이후에 전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더 빠르게 증가한다. 영업손익 대비 영업외손실은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1]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경상이익



[그림 Ⅳ-12]에서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의 추이를 보면, 영업외수익은 1997년과 1998년에 빠르게 증가했고 이후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업외비용도 1997년과 1998년에 매우 빠르게 증가했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업외손실은 외환위기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영업외비용의 계속적 감소에 힘입어 외환위기 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2]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표 Ⅳ-9> 3기간 평균증가율(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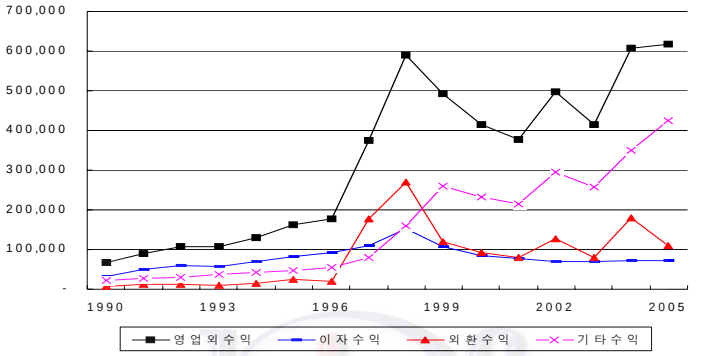
(단위: %)

	1990~1996년	1997~1998년	1999~2005년
영업손익	14.5	9.3	16.0
영업외수익	17.5	78.0	5.9
영업외비용	19.3	51.4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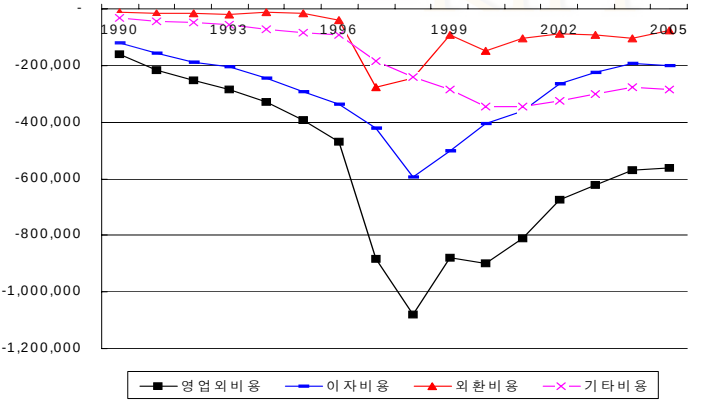
[그림 Ⅳ-13]과 [그림 Ⅳ-14]에서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외환차손, 기타비용의 추이를 보면, 영업외 수익의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은 기타영업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환위기 직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항목인 이자수익은 1998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중에 기업이 자신의 자산을 처분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업외

비용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이자비용의 감소이다. 이는 이자율과 부채비율의 하락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13]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외환차익, 기타수익 추이



[그림 Ⅳ-14]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외환비용, 기타비용 추이



<표 Ⅳ-10> 3기간 수익과 비용의 평균증가율: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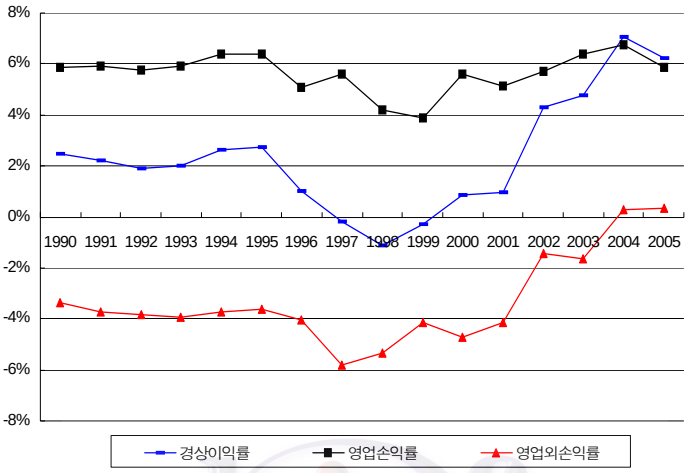
(단위: %)

	1990~1996년	1997~1998년	1999~2005년
이자수익	19.1	29.9	-10.8
이자비용	18.4	34.2	-14.7
외환수익	28.5	322	16.2
외환비용	66.9	303	-1.7
기타수익	15.5	81.4	20.2
기타비용	19.1	59.5	3.3

다.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이익지표 추이(매출액 대비 비율)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수준 변수의 움직임은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른 효과일 수 있으므로 이제는 매출액 대비 비율을 활용하여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의 비율인 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에 평균적으로 2.15%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기간에 음(-)의 수치까지 하락한 뒤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7% 수준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 6%대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기간 동안 4% 수준으로 소폭 하락한 뒤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시 6% 수준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준다. 반면 영업외 손익률은 외환위기 이전에 -4% 수준에서 외환위기 기간에 -6% 수준까지 하락한 뒤 급격하게 상승하여 최근 2004년과 2005년에는 양(+)의 값을 지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림 Ⅳ-15]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표 Ⅳ-11> 기간별 평균

(단위: %)

	1990~1996년	1997~1998년	1999~2005년
경상이익	2.15	-0.67	3.41
영업이익	5.90	4.92	5.62
영업외수익	2.54	5.38	4.08
영업외비용	6.30	10.97	6.29
영업외손익	-3.75	-5.59	-2.21
이자수익	1.34	1.48	0.69
이자비용	4.62	5.67	2.77
외환수익	0.32	2.49	0.94
외환비용	0.40	2.92	0.87
기타수익	0.80	1.34	2.40
기타비용	1.28	2.38	2.64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경상이익률과 영업외손익률의 개선은 눈부실 정도이다. 이러한 경상이익률의 증가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이익 및 비용 구성항목들의 외환위기 전후의 변화를 아래의 <표 Ⅳ-12>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이후에 경상이익률이 1.26%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0.28%포인트 감소했으나 영업외손익률이 1.54%포인트 증가하여, 경상이익률의 증가가 영업외손익률의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영업외 손익률의 증가는 이자손익률의 1.2%포인트 증가로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경상이익률의 증가에 이자손익률의 개선이 기여한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Ⅳ-12>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 대비 비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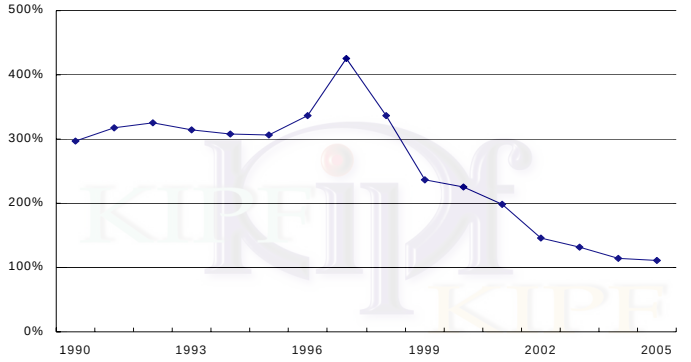
(단위: %포인트)

경상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영업외손익
1.26	-0.28	1.53	-0.01	1.54
이자수익	이자비용	이자손익	외환수익	외환비용
-0.64	-1.85	1.20	0.62	0.47
외환손익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손익	
0.15	1.59	1.36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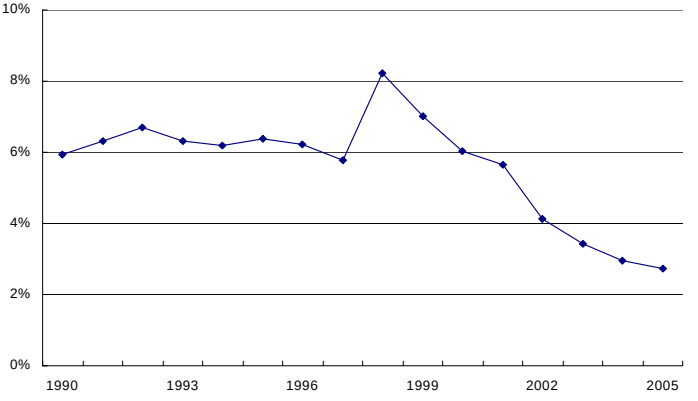
이자손익률의 변화는 부채비율의 변화와 이자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 300% 수준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 동안 4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한 뒤 이후 급격히 감소해서 2005년에는 10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이자손익률의 변화 추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자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6% 초반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며 8%까지 상승한 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3%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이자율은 금융부채뿐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 등 비금융부채를 포함하는 총부채를 분모로 활용하여 계산한 수치여서 실제 기업이 직면한 이자율보다는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렇지만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자율의 하락과 부채비율의 하락이 이자손익률을 개선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6] 자본 대비 부채비율



[그림 Ⅳ-17] 부채 대비 이자비용



<표 Ⅳ-13> 3기간 평균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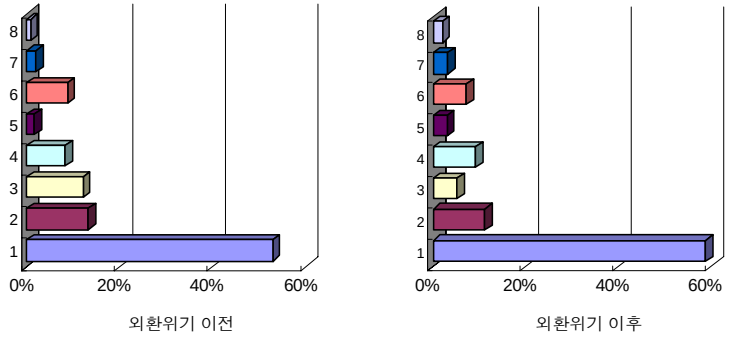
	부채/자본 비율	자본/자산 비율	이자/부채 비율
외환위기 이전	315	24	6.29
외환위기 기간	380	21	7.00
외환위기 이후	166	39	4.56

라. 산업별 비교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는 각 산업별로 경상이익률의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산업을 1-제조업, 2-전기·가스 및 수도업, 3-건설업, 4-도소매업, 5-운수업, 6-통신업, 7-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8-오락 및 문화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한 뒤 각 산업별 이익지표를 각 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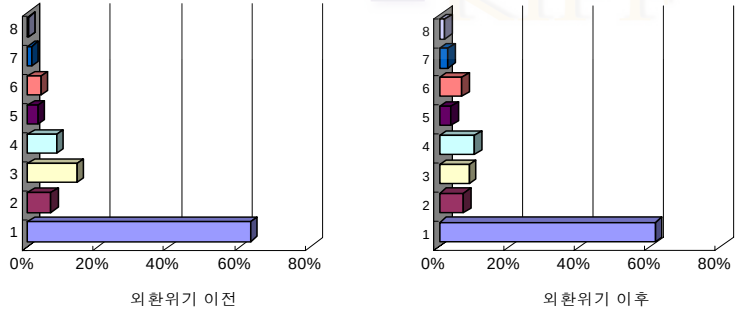
우선 아래의 [그림 Ⅳ-18]에 나타난 경상이익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오락 및 문화관련 서비스업에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60% 수준에 육박해서 대부분 경상이익의 증가가 제조업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뚜렷한 감소를 보이는 산업은 건설업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실적 악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8] 경상이익의 산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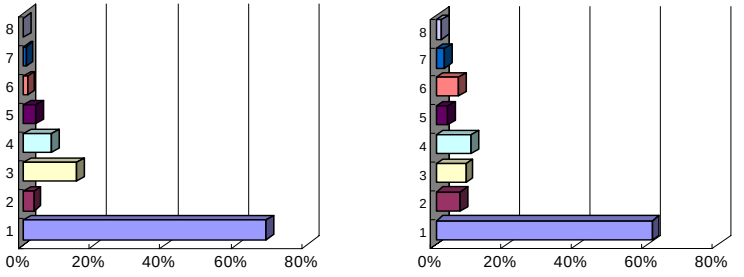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이자손익의 산업별 비중도 대체로 비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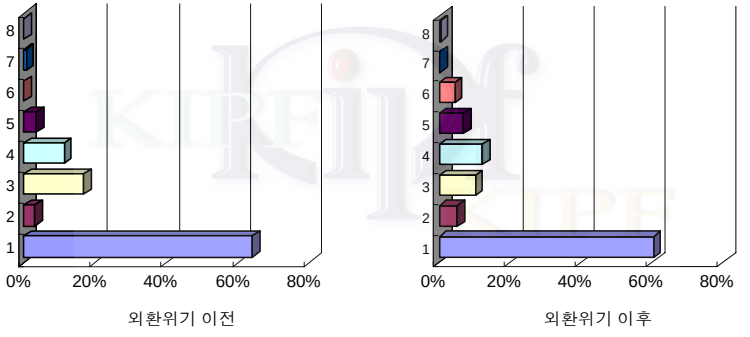
[그림 Ⅳ-19] 영업손익 비중



[그림 Ⅳ-20] 영업외손익 비중



[그림 Ⅳ-21] 이자손익 비중



지금까지 산업별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 산업의 경상이익 증가가 어느 한 산업의 경상이익 개선에 의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60% 수준에 육박해서 대부분 경상이익의 증가가 제조업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뚜렷한 감소를 보이는 산업은 건설업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한국신용평가 자료: Kis-value

전 장에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통해 기업의 이윤과 재무구조의 평균적인 변화를 검토할 수 있었으나, 총계자료라는 한계로 인해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영분석 자료와 같은 총계자료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개별 기업 자료에서도 확인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장에서는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개별 기업의 재무정보 자료 Kis-Value를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는 각 개별 기업을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으로 분류하여 각각 기업의 결산기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제공한다. 본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에 필요한 해당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된 변수 가운데 매출액과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missing) 데이터는 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고, 경상이익이 음(-)인지 양(+)인지를 기준으로 적자기업과 흑자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장 최근인 2006년에는 총 1만 4,430개의 기업의 정보가 활용되었으나 1990년에는 단지 2,805개의 기업에 대한 정보만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Kis-Value가 2006년 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2006년에 존재하는 기업 중 1990년에도 존재했던 기업은 2,805개라는 의미이다. 물론 1990년에 더 많은 기업이 활동했겠지만 아쉽게도 Kis-Value는 폐업한 기업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자료상의 한계로 남겨둔다.

<표 IV-14> 연도별 표본 자료수

(단위: 개)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적자기업	459	565	769	702	715	968	1,173	1,710	1,758
흑자기업	2,346	2,658	2,608	2,755	3,299	4,279	4,709	5,386	6,085
계	2,805	3,223	3,377	3,457	4,014	5,247	5,882	7,096	7,843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적자기업	1,284	1,856	2,164	2,335	2,760	2,785	3,361	3,723	
흑자기업	8,130	8,519	9,194	9,939	10,262	10,824	11,196	10,707	
계	9,414	10,375	11,358	12,274	13,022	13,609	14,557	14,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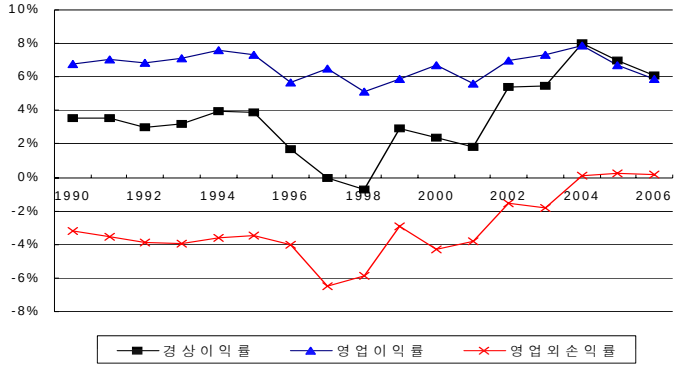
개별 기업들의 원자료를 통해 검토할 사항은 우선 연도별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비율의 분포를 통해서 영업외손익 비율의 감소가 확인되는가 등 기업경영분석의 총계자료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나타나는지이다. 또한 총계지표에서는 구분이 곤란했지만, 개별 기업자료에는 적자기업과 흑자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손익의 변화를 나누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 경상이익률 추이

적자기업과 흑자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1990년대 초반 3~4%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음(-)의 수준을 기록한 뒤,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4년에는 8% 수준까지 육박한 뒤 이후 다시 약간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 동안의 평균치가 3.13%였던 것에 비하여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평균치가 5.23%인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매출액의 증가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경상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

상이익은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이익과 주로 재무활동인 비영활동으로 인한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최근 경상이익률의 증가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영업이익률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6%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기간별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확인해 보면 외환위기 전 6.84% 수준이었고 외환위기 이후 6.65%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반면 영업외손익은 영업외수익보다 영업외 비용이 더 커서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음(-)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환위기 기간 -6% 수준까지 다다랐던 영업외손익률은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 양(+)의 수치로 반전된 뒤 2006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상이익률의 변화를 영업이익률과 영업외손익률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최근 경상이익률의 움직임은 영업외손익률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살펴본 총계자료인 기업경영 분석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림 Ⅳ-22]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흑자기업+적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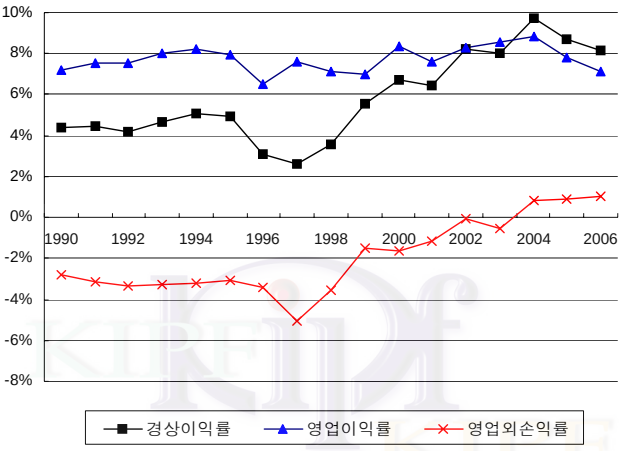
(단위: %)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외환위기 이전(91~96)	3.13	6.84	-3.71
외환위기 기간(97~98)	-0.40	5.76	-6.16
외환위기 이후(99~06)	5.23	6.65	-1.42

이제 세부담은 결손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적자기업과 흑자기업을 나누어 각각 경상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및 영업외수익률의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흑자기업의 경우 높은 경상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전 평균적으로 4.34%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7.95%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흑적자기업을 합한 경상이익률과 비교했을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그 차이가 1.2%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2.7%의 차이를 보여, 외환위기 이후 흑자기업의 경상이익률의 증가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이익률을 영업이익률과 영업외손익률로 나누어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은 약간 증가한 반면 영업외수익률은

매우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상이익의 증가는 대부분 영업외 수익의 증가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3]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흑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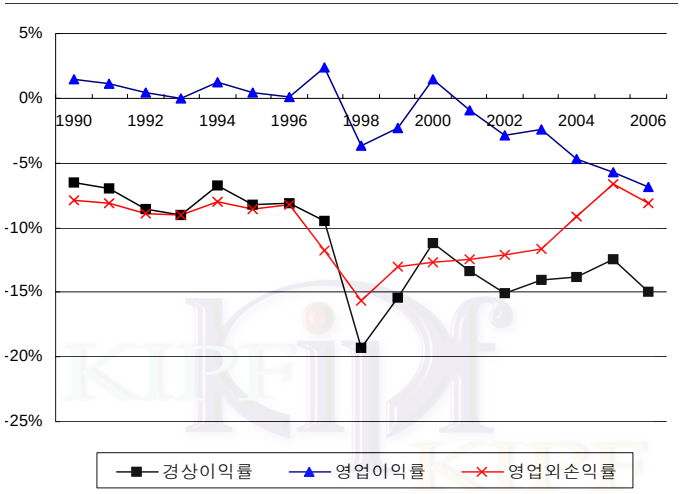
(단위: %)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외환위기 이전(91~96)	4.34	7.53	-3.19
외환위기 기간(97~98)	3.10	7.36	-4.26
외환위기 이후(99~06)	7.95	7.79	-0.02

적자기업의 경우 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적자 수준이 더욱 확대되는 추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평균 -7.92% 수준이었던 경상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평균 -13.52%로 약 2배 정도 확대되었다. 적자 폭 확대의 주된 이유는 영업이익률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흑자기업의 경상이익률 증가가 대부분 영업외손익률 확대였던 사실과 대비된다. 영업외손익률은 외환

위기 중 초래하였던 큰 폭의 손실을 이후 서서히 회복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Ⅳ-24]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적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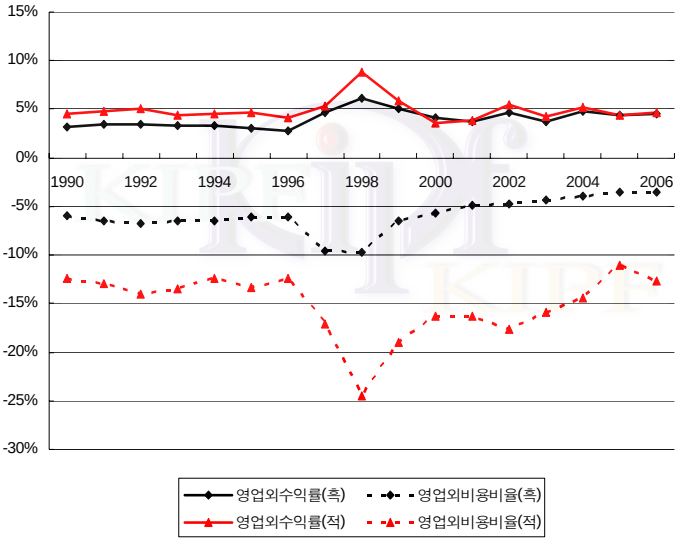
(단위: %)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외환위기 이전(91~96)	-7.92	0.51	-8.43
외환위기 기간(97~98)	-14.13	-0.51	-13.61
외환위기 이후(99~06)	-13.52	-2.45	-11.06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의 차이점은 결국 흑자기업의 영업외손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외화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어 경상이익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된 반면, 적자기업의 영업외손익은 다소 증가했음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아래의 [그림 Ⅳ-25]에서 영업외손익을 영

업외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업외수익률은 적자기업과 흑자기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지만 영업외비용률은 적자기업의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적자기업은 영업외비용의 주요 항목인 이자비용 측면에서 흑자기업보다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Ⅳ-25]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흑자기업과 적자기업 비교



영업외 수익 (단위: %)

	모든 기업	흑자기업	적자기업
외환위기 이전(91~96)	3.28	3.15	4.50
외환위기 기간(97~98)	5.74	5.42	7.00
외환위기 이후(99~06)	4.40	4.39	4.45

영업외 비용 (단위: %)

	모든 기업	흑자기업	적자기업
외환위기 이전(91-96)	-6.99	-6.35	-12.93
외환위기 기간(97-98)	-11.90	-9.68	-20.62
외환위기 이후(99-06)	-5.81	-4.41	-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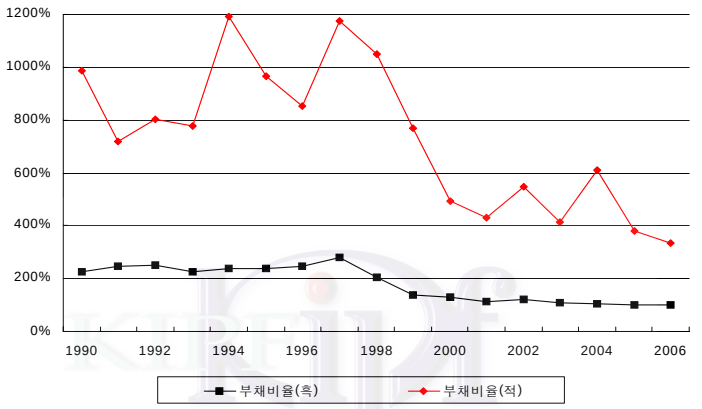
나. 이자부담 추이

기업의 영업이익은 시장적인 요인과 거시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쟁력 있는 흑자기업의 경우 환경 적응에 성공하여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이전과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는 반면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이전에는 일정 정도의 손실에 머물렀으나 새로운 환경에서는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외 손익은 보유 금융자산 규모 또는 내부보유 자금, 수익률, 환율 변화와 부채규모, 이자비용, 환율 등 기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전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자기업의 적자규모 확대는 대부분 영업외비용의 증가에 기인한다. 영업외비용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부담의 변화에 대하여 본절에서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자부담은 부채가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늘어나게 된다. [그림 Ⅳ-26]의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흑자기업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2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130%수준으로 점점 하락하게 된다. 이에 비해 적자기업의 부채비율은 흑자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심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추이를 보여준다. 1994년에는 무려 1,200%까지 이르렀다가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약 35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평균 부채비율이 적자기업은 흑자기업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자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26]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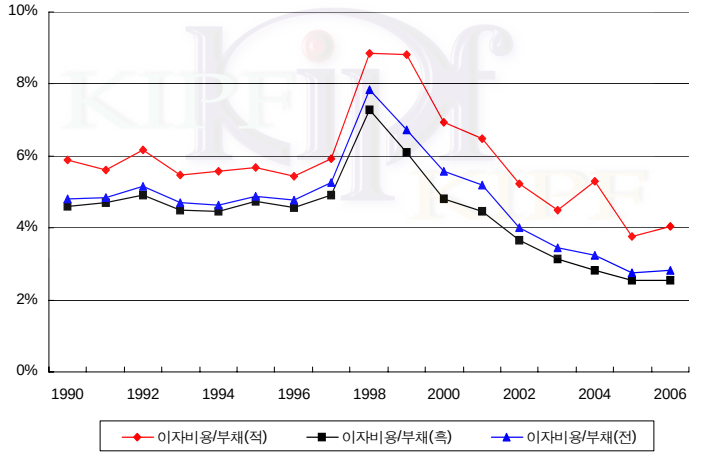
(단위: %)

	모든 기업	흑자기업	적자기업
외환위기 이전(91~96)	277.13	239.40	881.03
외환위기 기간(97~98)	320.11	236.01	1106.28
외환위기 이후(99~06)	134.98	110.80	461.12

이자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자비용을 부채비율로 나눈 수치를 이자율로 사용하였다. 물론 이자부담과 관련된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금융부채를 이자율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자비용을 총 부채로 나눈 수치를 활용했다. 따라서 이 이자율을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 왜냐하면 총

부채에는 금융부채 이외에도 이자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충당부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당성 부채의 규모는 특성상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자율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흑자기업의 이자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평균적으로 4.63%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3.56% 수준으로 약 25% 하락하였다. 적자기업의 이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5.62%에서 외환위기 이후 5.73%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7] 이자비용/부채비율



(단위: %)

	모든 기업	흑자기업	적자기업
외환위기 이전(91~96)	4.81	4.63	5.62
외환위기 기간(97~98)	6.54	6.08	7.45
외환위기 이후(99~06)	4.07	3.56	5.73

지금까지 살펴본 이자부담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흑자기업과 적자기업 모두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자율은 흑자기업에서는 감소하고 적자기업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적자기업은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영업외손익률이 악화되어 경상손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실증 분석

가. 경상이익률과 재무구조 개선

앞서의 기업경영분석이나 한국신용평가의 총계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소득 증가가 부채비율을 낮추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차입이자율의 하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총계자료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추론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성립할지는 실제의 개별 자료를 통한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절에서는 한국신용평가의 개별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상이익률 변화가 부채비율과 차입이자율의 변화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단,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분석 대상은 상장기업 자료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패널회귀분석 방법을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분석 대상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세 기간으로 분리하였는데, 각 개별 기간 동안 3개년 이상 관측치를 보이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1기(외환위기 전): 1990년 ~ 1996년
2기(외환위기 중): 1997년 ~ 1998년
3기(외환위기 후): 1999년 ~ 2006년

각 기간 동안 개별 기업의 경상이익률, 자산 대비 부채비율,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 매출액 증가율, 노동-자본비율(자산 대비 인건비 비율)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다음의 회귀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 1은 더미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모형이고, 회귀분석 2는 더미변수를 제외한 랜덤효과 패널회귀분석 모형이다. 패널회귀분석모형의 추정에는 일반최소자승법(GLS)이 이용되었다. 회귀분석 3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더미변수(D1)가 모형에 추가되었고, 회귀분석 4는 산업구분(D2) 더미변수까지 고려하였다.

패널회귀 모형

$$OR_{i,t} = \alpha + \beta DR_{i,t} + \gamma IR_{i,t} + \delta SGR_{i,t} + \eta KLR_{i,t} + \theta D_{1i,t} + \mu D_{2i,t} + \epsilon_{i,t}$$

변수의 정의

t: 기간 (=1, 외환위기 이전, =2, 외환위기 기간, =3, 외환위기 이후)
OR: 경상이익률
DR: 자산 대비 부채 비율
IR: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
SGR: 매출액증가율
KLR: 자산 대비 인건비 비율
D1: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 더미변수 (대기업=1)
D2: 산업구분 더미변수(각 산업)
산업구분: I2-전기가스업, I3-건설업, I4-도소매업, I5-운수업, I6-통신업, I7-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I8-오락등 문화산업, I9-금융업, I10-기타산업

패널회귀분석의 추정 결과는 <표 Ⅳ-15>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자산 대비 부채 비율과 이자율은 모두 경상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 기대대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개선은 경상이익률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이자율의

인하도 경상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개별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경상이익률 증가에 주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하며,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포인트 감소하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약 1%포인트 가량 증가하고, 부채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경상이익률 2.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액 증가율의 상승과 노동-자본비율의 증가도 일반적 예측과 동일하게 경상이익률에 각각 정(+)의 효과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자본 비율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재무구조 조정에 비해 인력 구조조정은 경상이익률의 개선에 대한 기여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경상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경상이익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비해 더 뚜렷한 이익의 증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산업구분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더미변수 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서,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은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소매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상이익률은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패널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1 (Fixed Effect)	회귀분석 2 (Random Effect)	회귀분석 3 (Random Effect)	회귀분석 4 (Random Effect)
상수항		0.221 (17.56)***	0.263 (-26.87)***	0.257 (25.22)***	0.264 (25.71)***
DR (부채/자산비율)		-0.137 (-6.90)***	-0.199 (-14.26)***	-0.201 (-14.39)***	-0.202 (-14.29)***
IR (이자비용/부채비율)		-2.277 (-19.97)***	-2.287 (-25.33)***	-2.272 (-25.12)***	-2.292 (-25.16)***
SGR (매출액증가율)		0.145 (6.05)***	0.204 (9.47)***	0.203 (9.41)***	0.201 (9.30)***
LKR (노동-자본비율, 인건비/자산비율)		0.004 (0.82)	-0.005 (-1.87)*	-0.005 (-1.82)*	-0.002 (-0.68)
D1 (대기업,중소기업)				0.013 (2.07)**	0.016 (2.39)**
D2(I2) (전기가스증기업)					-0.044 (-1.47)
D2(I3) (건설업)					-0.136 (-0.91)
D2(I4) (도소매업)					-0.028 (-2.26)**
D2(I5) (운수업)					-0.002 (-0.10)
D2(I6) (통신업)					-0.022 (-0.50)
D2(I7)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0.063 (-4.39)***
D2(I8) (오락문화산업)					-0.0455 (-0.65)
D2(I10) (기타산업)					-0.010 (-0.42)
R-sq	within	0.2797	0.2754	0.2752	0.2761
	between	0.3999	0.4332	0.4350	0.4488
	overall	0.3305	0.3405	0.3417	0.3485

주: 1. reg1의 ( ) 안은 t-value값, reg2,3,4의 ( ) 안은 Z값.
2. *, **, ***는 각각 90%, 95%, 99% 신뢰수준.

동일한 목적의 분석으로 위에서와 같은 패널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차분변수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접근 방법의 핵심은 먼저 전체 분석대상 기간을 두 기간으로 분리하고, 양 기간간 개별기업의 경상이익률(매출액 대비), 부채비율, 차입이자율(이자비용/부채수준), 매출액 증가율, 자산 대비 인건비율의 차이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데에 있다. 앞서의 패널회귀분석은 외환위기 전후와 외환위기 동안을 모두 포함한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반면, 횡단면 분석방법은 단지 외환위기 전후의 차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춘 분석이 가능하다.

1기(외환위기 전: 1990년부터 1996년까지)
2기(외환위기 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횡단면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Ⅳ-16>에 정리되어 있으며, 패널회귀분석모형의 추정 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이전과 유사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의 감소는 경상이익률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계수값은 -0.45 내외로 추정되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약 20%포인트 감소하면 경상이익률은 약 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회귀 모형

$$ORD_i = \alpha + \beta DR_i + \gamma IR_i + \delta SGR_i + \eta KLR_i + \theta D_{1i} + \mu D_{2i} + \epsilon_i$$

변수의 정의
ORD: 외환위기 전후 경상이익률의 차이
DR: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차이
IR: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차이
SGR: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
KLR: 자산 대비 인건비 비율의 차이
D1: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 더미변수 (대기업=1)
D2: 산업구분 더미변수(각산업)
산업구분: I2-전기가스업, I3-건설업, I4-도소매업, I5-운수업, I6-통신업, I7-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I8-오락 등 문화산업, I9-금융업, I10-기타산업

<표 Ⅳ-16>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1	회귀분석 2	회귀분석 3	회귀분석 4
상수항	-0.131 (-16.96)***	-0.106 (-11.77)***	-	-
DR (부채/자산비율)	-0.458 (-18.03)***	-0.465 (-18.46)***	-0.470 (-18.77)***	-0.461 (-18.89)***
IR (이자비용/부채비율)	-0.597 (-2.74)***	-0.323 (-1.46)	-0.333 (-1.50)	-0.632 (-2.87)***
SGR (매출액증가율)		0.243 (5.24)***	0.192 (4.07)***	0.173 (3.74)***
LKR (노동-자본비율, 인건비/자산비율)		-0.002 (-0.46)	-0.003 (-0.59)	-0.004 (-0.770)
D1 (대기업,중소기업)				0.082 (7.06)***
D2(I2) (전기가스증기업)			0.027 (0.51)	-0.013 (-0.25)
D2(I3) (건설업)			0.016 (0.63)	0.002 (0.11)
D2(I4) (도소매업)			-0.050 (-2.24)**	-0.056 (-2.59)**
D2(I5) (운수업)			0.052 (1.38)	0.032 (0.87)
D2(I6) (통신업)			-0.022 (-0.28)	-0.046 (-0.60)
D2(I7) (부동산,사업서비스업)			-0.098 (-3.90)***	-0.101 (-4.13)***
D2(I8) (오락문화산업)			0.019 (0.15)	-0.025 (-0.21)
D2(I10) (기타산업)			0.041 (0.93)	0.031 (0.71)
R-sq	0.305	0.326	0.343	0.377

주: 1. ( ) 안은 t-value값.
2. *, **, ***는 각각 90%, 95%, 99%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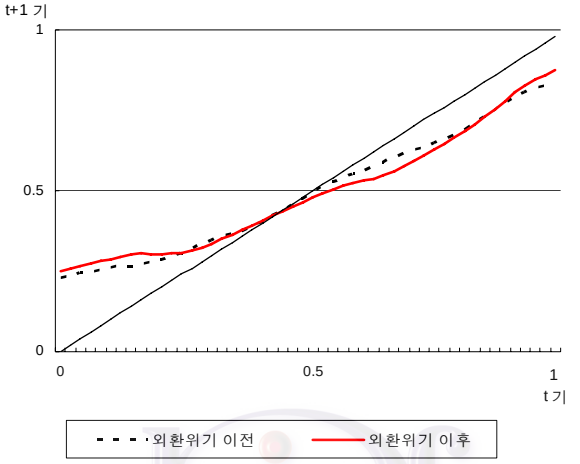
나. 기업 수익률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 소득변이함수 접근법

외환위기 이후 기업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한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은 계속 흑자 폭이 확대되는 반면, 적자기업들의 손실은 계속 지속되거나 적자 폭 자체가 커지는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제 개별 기업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본절의 목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절에서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기업소득 변이(transition)함수에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기업 수익률 구조의 고착화 또는 양극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상장기업으로 국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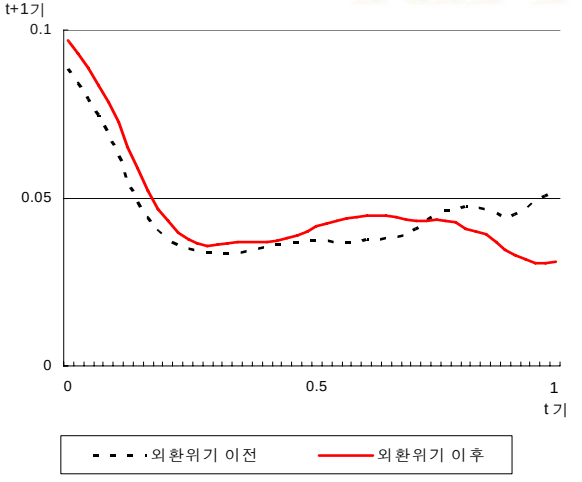
먼저 기업 경상이익의 변이 분석을 경상이익률의 순위를 중심 진행한다. 이 방법의 요체는 개별 기업의 경상이익률 순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t년도에 일정한 경상이익률 순위를 갖는 기업의 차기연도(t+1년도) 경상이익률 순위의 분포가 어떠한 형태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심은 이러한 순위 변이의 확률분포가 외환위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조건부 분포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과 조건부 분산(conditional variance)으로 나누어 관찰한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경상이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인접한 두 해의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 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생성한다. 동일한 방법을 외환위기 이후(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상이익률 자료에 적용하여 순위의 변이 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는다. 비모수적 추정방법(Nadaraya-Watson kernel estimator)을 이용하여, t년도 경상이익률 순위가 주어졌을 때, 차기연도 경상이익률의 순위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조건부 분산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28]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평균
(외환위기 전과 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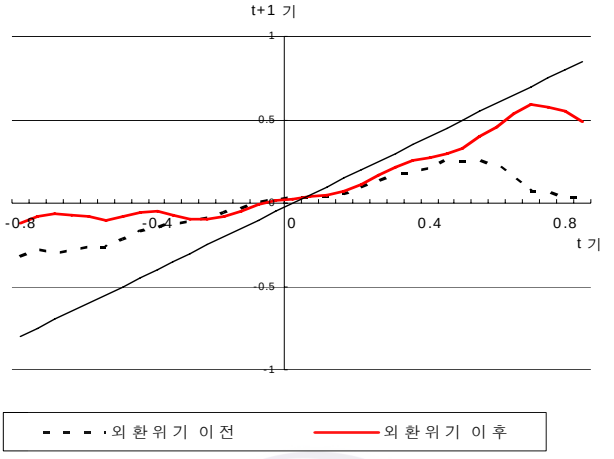
[그림 Ⅳ-29]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분산
(외환위기 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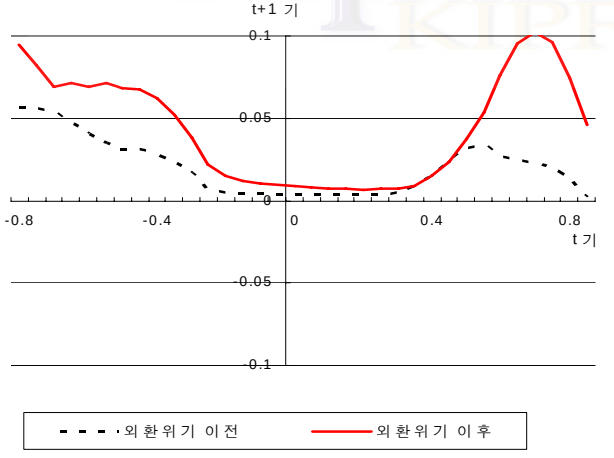
[그림 Ⅳ-28]에 나타난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평균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45도 기울기보다 약간 완만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금년도에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기업은 다음 해에 다소 낮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금년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업은 차기연도에 성과가 다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45도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다는 것은 현재의 순위가 어느 정도는 다음 기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조건부 평균)의 형태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은 외환위기 이후에 경상이익률 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순위변이 확률분포의 조건부 분산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현재 우량한 기업의 다음 기의 성과(평균적으로 여전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에 대한 불확실성은 외환위기 전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량기업의 순위가 떨어질 가능성은 외환위기 이후에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건부 분산의 전반적인 형태는 하위기업의 다음 기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업 경상이익의 변이 분석을 개별 기업의 경상이익률 순위가 아닌 경상이익률의 수준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파악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경상이익률 변이의 조건부 확률분포가 외환위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전 5개년과 위기 이후 5개년의 경상이익률 수준 변이의 기초 자료를 생성한 후, 비모수적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t년도 경상이익률이 주어졌을 때 차기연도 경상이익률 수준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조건부 분산을 구한다.

[그림 Ⅳ-30] 경상이익률의 조건부 평균(외환위기 전, 후)



[그림 Ⅳ-31] 경상이익률의 조건부 분산(외환위기 전, 후)



기업 경상이익률 수준의 변이 과정에 대한 추정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기 경상이익률 자체에 대한 조건부 평균의 모습 역시 45도선 이하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기업의 경상이익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의 경상이익률 순위 변이함수의 경우와 달리, 경상이익률 수준의 변이 양상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높은 경상이익률 수준을 보이는 기업의 경우 미래의 경상이익률에 대한 조건부 평균이 45도선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커서 이 기업의 경상이익률이 다음 기에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이익 반전의 가능성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미래의 경상이익률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45도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우량기업의 높은 경상이익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반전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량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이익구조의 고착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낮은 경상이익률 기업의 경우에도 미래 경상이익률의 개선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이익 증가가 전체 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경상이익률 변이 분포함수의 조건부 분산의 형태는 양 극단에 위치한 기업의 차기연도 경상이익에 대한 기대치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상이익률 수준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법인 수의 증가와 100대 기업 실적의 영향

앞서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평균적인 기업의 세부담 변화와 소득 증가가 법인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업단위 분석만으로 전체 법인세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 법인 수가 일정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법인등록 기업의 수는 2000년 이후 4개년 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에, 기업단위 분석 이외에 전체 법인 수의 증가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가 큰 몇몇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환위기인 1998년 이전에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64%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본장에서는 납부세액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들을 분류한 뒤,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1. 법인 수의 증가

1997년에 9만 5천개 수준이던 흑자법인 수는 2005년에는 22만 3천개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표 Ⅳ-1>을 보면, 흑자법인 수의 증가율은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2.6%, 6.17%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으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매년 10% 이상의 빠른 증가

세를 보여주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4.52%와 6.27%로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간인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흑자법인 수의 평균 증가율은 11.66%를 기록하고 있으며, 법인세 징수액의 증가율은 평균 18.84%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수는 9조원에서 29조원으로 약 3배 증가하여 법인 수의 증가와 법인세수의 증가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총 법인세 징수액을 법인 수로 나누어 살펴본 법인 1개당 납부세액은 1997년 1억원, 1998년 1억 1천만원 수준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며 1999년에는 9천만원까지 하락했으나, 2000년에 1억 3천만원으로 급등한 후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1억 1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 1개당 납부세액의 증가율은 큰 편차를 보여주지만 평균적으로 5.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법인의 수가 11.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인당 납부액은 일정한 가운데 법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표 Ⅴ-1> 법인 수와 법인세수의 증가

(단위: 개, %, 백만원)

	법인수	증가율	징수액	증가율	1개법인당 납부액	증가율
1997	94,392		9,424,669		100	
1998	96,842	2.60	10,775,797	14.34	111	11.44
1999	102,813	6.17	9,365,392	-13.09	91	-18.14
2000	133,072	29.43	17,878,435	90.90	134	47.49
2001	154,745	16.29	16,975,149	-5.05	110	-18.35
2002	177,383	14.63	19,243,149	13.36	108	-1.11
2003	201,075	13.36	25,632,684	33.20	127	17.51
2004	210,160	4.52	24,678,343	-3.72	117	-7.89
2005	223,331	6.27	29,805,400	20.78	133	13.65
평균	154,868	11.66	18,197,669	18.84	115	5.58

주: 법인 수는 흑자법인 수임.

법인 수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모형을 사용한다. 모델 1에서는 로그를 취한 영업잉여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모델 2에서는 로그를 취한 영업잉여뿐 아니라 법인 수까지도 설명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모델 1과 모델 2의 비교를 통해 법인 수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델 1: $Y_t = \alpha + \beta_1 X_{1,t} + e_t$
모델 2: $Y_t = \alpha + \beta_1 X_{1,t} + \beta_2 X_{2,t} + e_t$

Y: GDP 대비 신고세액(1975~2004년)
X_1: ln(영업잉여)
X_2: ln(법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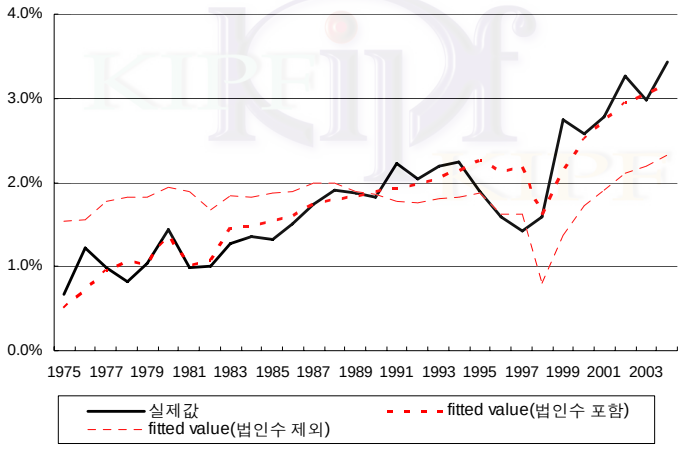
아래의 <표 V-2>에 요약되어 있는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 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은 모델 1의 경우 R-square값이 0.134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설명변수로 법인 수를 추가한 모델 2의 경우 R-square값이 크게 개선된 0.859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 수가 법인세수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인 GDP 대비 신고세액의 실제값과 모델 1, 2의 추정을 통해 추정된 Fitted Value를 비교한 [그림 V-1]을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모델 2의 Fitted Value는 실제값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여주는 반면 모델 1의 Fitted Value는 실제값과 큰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Ⅴ-2> 법인 수와 법인세수에 대한 추정결과

	모델 1(법인 수 제외)	모델 2(법인 수 포함)
상수항(α)	0.0410*** (3.67)	-0.0327*** (-4.22)
ln 영업잉여(β_1)	0.0102** (2.07)	0.0078*** (3.82)
ln 법인 수(β_2)		0.0061*** (11.79)

주: ( ) 안은 t-value, *, **, ***는 각각 90%, 95%, 99%의 유의수준을 의미.

[그림 Ⅴ-1] GDP 대비 신고세액의 실제값과 Fitted Value 비교



모델 2의 추정 결과, 설명변수인 법인 수의 계수 값(β_2)는 0.0061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법인 수가 10%포인트 증가하면 GDP 대비 법인세수는 0.58%포인트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5].

5) 법인 수에 대하여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실제 법인 수

민희철(2006)은 법인 수의 증가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평균 유효세율의 변화가 법인 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산업별 법인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별기업의 평균 유효세율, 사업체별 이윤율의 표준편차, 사업체의 평균자본스톡, 산업별 매출액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 유효세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법인 사업체 수의 비중은 약 0.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앞서 제Ⅲ장에서 살펴본 평균 유효세율의 감소추이가 최근 법인 수의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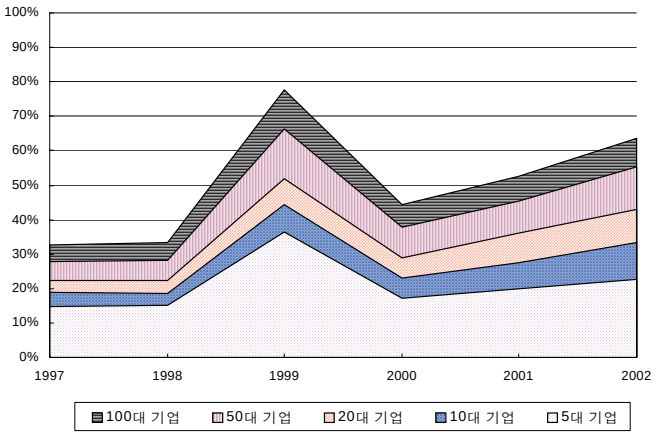
2.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영향

2005년을 기준으로 약 33만개의 기업이 국세청에 신고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적자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면 실제로 법인세수는 몇몇 대규모 기업에 의존한다. [그림 Ⅴ-2]는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1999년을 제외하면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1998에는 5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15%를 담당했고, 10대 기업은 19%, 20대 기업은 22%, 50대 기업은 28%, 100대 기업은 33%의 비중을 차지했음이 확인된다. 또한 5대 기업의 납부액이 100대 기업 납부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에는 100대 기업의 비중이 78%, 5대 기업의 비중이 36%에 육박하는 등 상위기업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1999년에 상위기업들이 오히려 큰 흑자를 기록한 반면, 경

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 수를 30만개로 가정한다. 따라서 법인 수 10%의 증가는 3만개의 법인이 증가할 경우이며, 이때 GDP 대비 법인세수는 0.58%포인트 증가한다.

제위기의 여파로 대다수의 법인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에는 5대 기업의 비중이 17%, 100대 기업의 비중이 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의 충격을 서서히 극복하게 되면서 기업의 소득이 크게 개선되고 전체 기업들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상위기업들의 비중은 과거 1998년보다는 커졌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아왔음을 보여준다. 이후 2001년에는 전체 세수에서 5대 기업이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100대 기업은 전체 세수의 절반이 넘는 53%의 비중을 차지했다. 2002년에도 증가추세는 이어져서 5대 기업이 23%, 100대 기업은 64%의 법인세수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에 대하여 5대 기업과 100대 기업을 비교해 보면, 5대 기업의 비중보다는 100대 기업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기업의 비중이 1997년 15%에서 2002년 23%로 1.5배 증가했으며, 100대 기업의 비중은 1997년 33%에서 2002년 64%로 1.9배 증가하였다.

[그림 Ⅴ-2] 전체 법인세수에서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들 가운데 20개의 기업은 6년 동안 줄곧 상위 100위 이내에서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6개 기업은 단지 한개 연도만 납부세액 상위 100위 이내에 속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납부세액 기준의 기업 순위가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2년 동안 존재했던 기업 수가 59개, 3년 동안 존재했던 기업 수가 29개로 확인되어,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3년 동안만 이에 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3> 조사대상 기간(6년) 동안 100위권 이내에 존재했던 기업의 빈도

(단위: 개)

기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기업수	20	17	16	29	59	126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50.72%를 담당했다. <표 Ⅴ-4>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법인세수는 13.9조원 규모였으며, 상위 100대 기업의 연평균 납부세액은 7.1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 연평균 증가율은 35% 수준인 것에 비해 전체 법인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로 확인되어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 증가가 전체 법인세수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상위 100대 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02년에는 전체 법인세수의 63.5%인 12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상위 기업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표 V-4> 납부세액 100위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

(단위: %, 억원)

	평균유효세율 (세액/과표)	과세 표준	증가율	총부담 세액	증가율	전체세수 (전체법인)	증가율	비중
1997	25.10	122,079		30,640		94,247		32.51
1998	24.81	144,944	18.73	35,966	17.38	107,758	14.34	33.38
1999	24.06	302,628	108.79	72,825	102.48	93,654	-13.09	77.76
2000	24.49	324,609	7.26	79,512	9.18	178,784	90.90	44.47
2001	24.97	357,717	10.20	89,332	12.35	169,751	-5.05	52.63
2002	23.09	529,686	48.07	122,316	36.92	192,431	13.36	63.56
평균	24.42	296,944	38.61	71,765	35.66	139,438	20.09	5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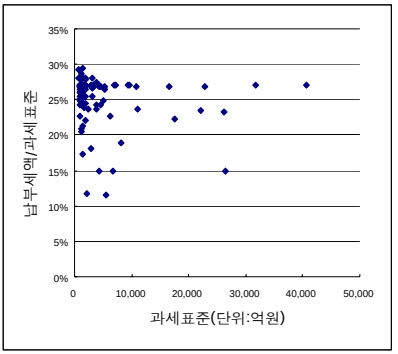
1997년부터 2002년 동안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6]은 약 24.42%로 계산되었으며,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준다. 각 연도의 평균 유효세율은 1997년 25.1% 수준에서 1998년 24.81%, 1999년 24.06%로 소폭 하락한 뒤, 2000년과 2001년에는 24.29%와 24.97%로 약간 상승하였다. 2002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관측기간 중 가장 낮은 23.0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인세 명목세율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28%(과세표준 1억원 이하 16%), 2001년부터는 27%(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가 적용되었다.

아래의 [그림 V-3]에서는 종축에 과세표준을, 횡축에 평균 유효세율을 사용하여 기업규모가 평균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과세표준과 평균 유효세율의 관계가 거의 수평적 관계로 나타나서, 기업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세부담은 누진적이거나 또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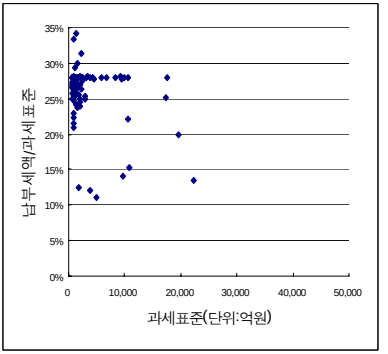
6) 여기서의 평균 유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Ⅴ-3] 연도별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과세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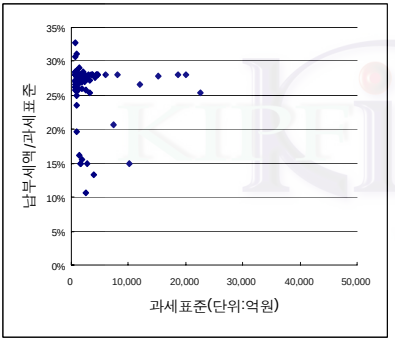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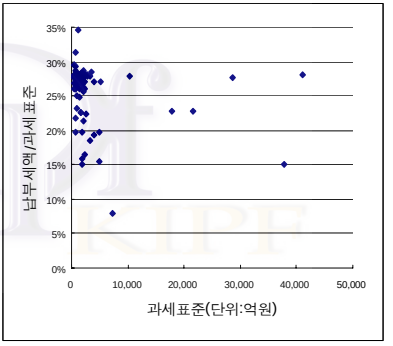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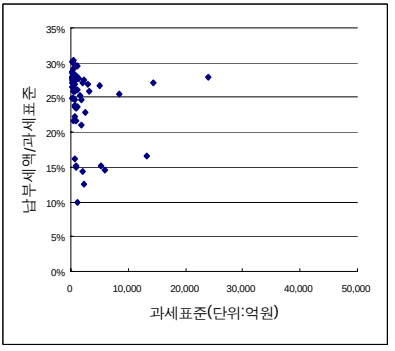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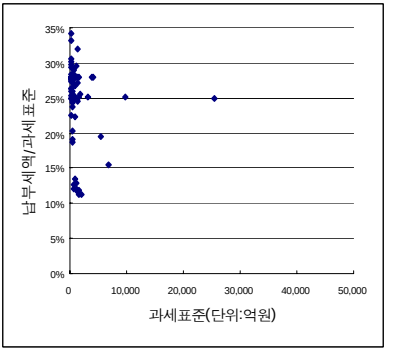
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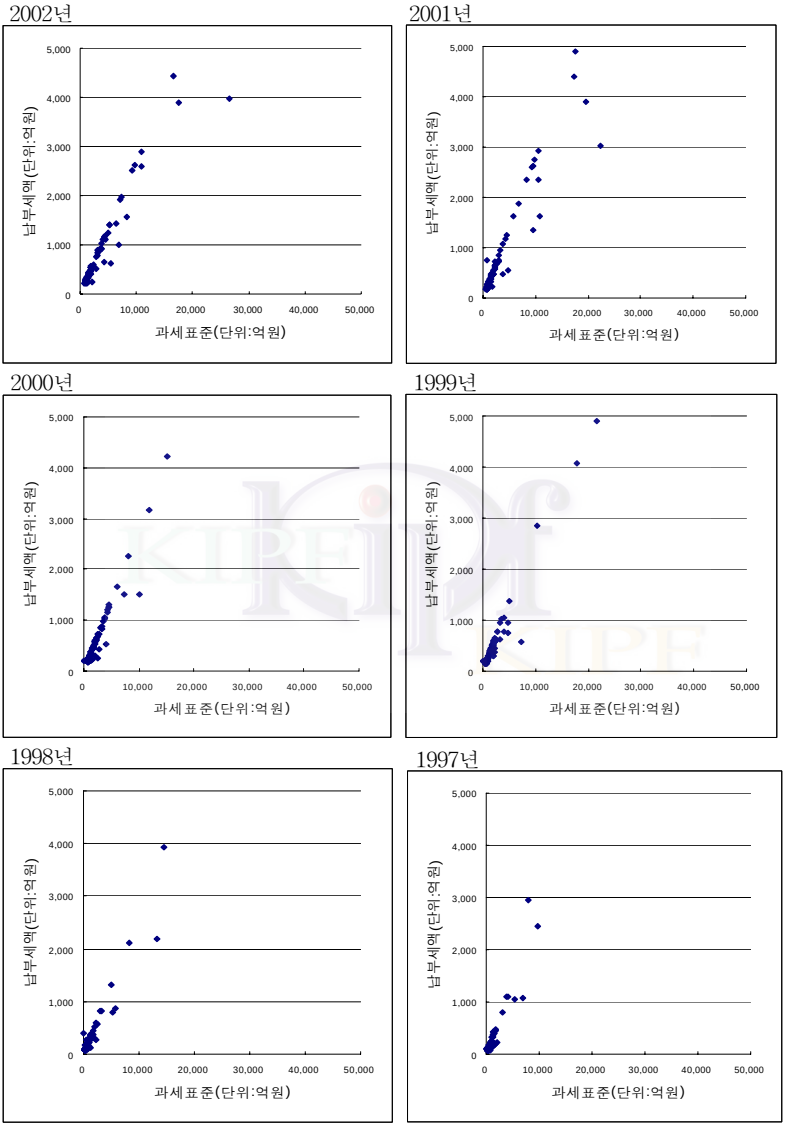
1998년



1997년



[그림 Ⅴ-4] 연도별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



위의 [그림 V-4]에서는 연도별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관계를 보여준다.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세액도 같은 크기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납부세액과 과세표준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납부세액을 설명변수로 과세표준을 사용하는 간단한 회귀식을 구성할 수 있다.

$$Y = \alpha + \beta X + e$$

Y: 납세액(단위: 천원)
X: 과세표준(단위: 천원)

자료: 1997~2002년 세수 상위 100대 기업의 납세액 및 과세표준

회귀식을 활용한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표 V-5>에 제시되어 있다. 1997년과 1998년의 한계유효세율은 각각 25.1%, 25.2%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9년에는 22.9%로 낮아진다. 이후 2001년의 25.7%를 제외하면 2000년과 2002년에는 19% 수준의 낮은 한계 유효세율을 보여준다. 1997년부터 2002년을 대상으로 구한 한계 유효세율의 평균치는 21.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들어 보여지는 한계 유효세율의 하락추이는 평균 유효세율의 하락추이와도 유사하며, 이를 종합하면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은 증가하였지만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Ⅴ-5> 납부세액 100위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97~02
상수항 (α)	-106,652 (-0.07)	-962,530 (-0.51)	3,119,596 (0.66)	16,615,491 (3.95)***	-2,860,173 (-0.65)	20,837,017 (3.08)***	7,581,754 (3.98)***
한계 유효세율(β)	0.251 (52.82)***	0.252 (47.22)***	0.229 (35.55)***	0.192 (35.56)***	0.257 (47.11)***	0.191 (32.47)***	0.215 (84.15)***
R-square	0.966	0.958	0.928	0.929	0.957	0.914	0.922

주: ( ) 안은 t-value, *, **, ***는 각각 90%, 95%, 99%의 유의수준을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위 100대 기업이 법인세수에 차지하는 비중 및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로 인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 수익률의 증가는 상위 100대 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수가 편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상위 기업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위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득 규모도 커지는 현상이 점차 두드러진 것은 기업 규모의 양극화로 인한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Ⅵ. 결 론

최근 법인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기업의 외부적·내부적 환경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인세수의 증가 원인을 먼저 법인의 평균 유효세율과 소득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개별 기업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평균 유효세율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반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경상이익은 재무구조 개선에 힘입어 영업외수지가 개선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개별 기업단위 차원의 요인 이외에, 전체 법인의 수도 총 법인세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법인 수의 변화는 법인세수의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만 아니라, 특히 2000년 이후 법인 수의 급격한 증가가 법인세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순위에 따른 소득 규모의 격차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점차 심화되어 기업 소득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법인세수 증가가 상위 기업의 소득 변화에 국한된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 8.5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가 400조원에서 810조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법인세수의 증가는 경제규모의 성장보다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수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국세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23%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의 국세 대비 비중 1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법인세수의 증가와 더불어 법인세수의 변동성(volatility)도 크게 증가하여, 2000년대의 법인세 변동성은 1980년대에 비해 2.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법인세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법인세수의 증가요인을 법인의 세부담, 법인소득, 법인의 수, 기업 소득 규모격차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기업의 세부담의 변화를 나타내는 적절한 총계지표로서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신고액 등을 비교하였다. 국세청 신고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지표들은 기업의 결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세부담을 계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 유효세율의 총계지표로는 국세청 사업연도소득 대비 법인세 신고액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 지표에 따르면 평균 유효세율은 1980년대 동안 20% 수준을 유지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 25% 수준으로 상승한 뒤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18% 수준을 보이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세부담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담 결정요인을 명목세율,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으로 나누어 분해한 결과, 명목세율과 이월결손금이 평균 유효세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003년 세제개편에 따른 명목세율의 인하와 외환위기 이후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증가는 평균 유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세율과 감면율 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과거 세제정책의 운용에서 세율 결정과 감면제도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의 명목세율과 감면율 간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단기적

으로는 명목세율의 변화가 감면율의 변화를 선도하는 방식의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명목세율과 감면율 간의 장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업잉여,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 국세청 사업연도소득, 결손을 고려한 사업연도소득 등의 소득 총계지표에 따르면, 기업의 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소득에 관한 거시지표에서는 소득의 원천을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에, 총계지표 이외에 기업경영 분석과 한국신용평가의 개별 기업 재무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2.15% 수준을 유지하였고 외환위기 기간에는 -0.67%로 하락한 뒤, 2000년대에 평균 3.41%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재무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영업외손익률은 외환위기 이전 -4% 수준에서 위기 이후 -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소득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보다는 재무구조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영업외손익의 개선에 기인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신용평가의 개별 기업 재무자료를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흑자기업에서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유사한 결과가 관측되었다. 이와는 달리 적자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하여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흑자기업의 경상이익률 증가가 대부분 영업외손익률 확대에 기인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총계자료가 아닌 개별 기업 자료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이 수익률 증가의 주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 등의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패널회귀분석에 따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과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하락은 경상이익률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포인트 감소하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약 1%포인트 증가하고 부채 대비 이

자비용 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경상이익률은 2.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기업 자료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상이익의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업소득의 변이(transition)함수에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기업 수익률 구조의 고착화 또는 양극화 문제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평균을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45도 기울기보다 약간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금년도에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기업은 다음 해에 다소 낮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금년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업은 차기연도에 성과가 다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조건부 평균)의 형태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에 경상이익률 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앞서의 경상이익률 순위 변이함수와는 달리, 경상이익률 수준 자체의 변이 양상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미래의 경상이익률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45도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우량기업의 높은 경상이익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량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이익구조의 고착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낮은 경상이익률을 보이는 기업의 경우에도 미래 경상이익률의 개선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이익 증가가 전체 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법인세수의 증가에는 법인소득의 증가뿐 아니라 법인 수의 증가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9만 5천개 수준이던 흑자법인의 수는 2005년에 22만 3천개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한 개 법인당 납부세액은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법인 수의 증가가 세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서 법인 소득뿐 아니라 법인 수를 포함해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수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은 0.5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실적 상위 100대 기업의 소득과 법인세 납세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소득 차별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법인세(또는 소득)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33%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약 64%로 1.9배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상위 5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과세표준(소득)을 기업규모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평균 유효세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세부담은 누진적이거나 또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여,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납부세액은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 증가는 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따른 법인소득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수익률의 증가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업규모의 양극화로 인한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의 법인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단순히 기업의 세부담(평균 유효세율)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률 개선이나 전체 법인 수의 증가 또는 규모에 따른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와 같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조정 성과로서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영업외손익이 크게 개선되어, 기업의 경상이익과 법인세수가 함께 증

가하였다. 이외에 외환위기 직후 신설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전체 법인 수의 변화도 법인세수의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 대규모 기업과 다수의 소규모 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 대규모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거대 우량기업의 고수익구조가 지속됨으로써 전체 법인세수 신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의 심화를 수익구조의 양극화로 해석할 수는 없다. 실제 자료에서 기업의 수익률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외환위기 이후 수익률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법인세수의 증가 추이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재무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외손익률 개선 효과는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기업소득 증가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개선 여지는 많지 않다. 따라서 2000년대 초와 같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한 기업소득과 법인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법인 수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의 증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제상에서 유리한 혜택을 누림에 따라 법인기업의 신설뿐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법인 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2009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법인 수의 급격한 증가는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수 우량기업의 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화의 경향과 기업의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소득의 격차가 심화되어 규모의 양극화는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우량기업의 양호한 수익구조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법인세수의

우량기업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미래 법인세수의 증가 추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에 기업의 이윤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기업회계의 투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 높다. 따라서 최근 기업회계 감독과 관련한 주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규정 강화가 기업의 신고소득 증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외환위기를 전후로 기업회계의 투명성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KIPF KIPF

참고문헌

곽태원,『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한국개발연구원, 1985.

———,『법인소득 과세의 이론과 현실』, 한국개발연구원, 2005.

———·이병기·현진권,『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토빈 q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연구보고서 05-30, 한국경제연구원, 2005.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호.

김우철,『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5.

김진수·김재진,『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0.

———·박형수·안종석,『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향 :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3.

———·이준규,『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김태종·이영·성태윤,『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민희철,「법인-비법인 사이의 자원배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효과 분석」,『재정포럼』, 제120호, 한국조세연구원, 2006. 6.

박기백·김진,『법인세 부담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이인실·김성태·안종범·이상돈,『법인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이철인·전영준·김정훈,『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분석』, 한국조세연

구원, 1999.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조세개요』, 2006.
전주성, 「기업특성과 세부담: 대안적 평균유효세율 측정치의 비교」, 『공공경제』, 제9권 1호, 한국재정학회, 2004.
최수미, 『회계투명성 측정과 제고방안』, LG경제연구원, 2004.
한국신용평가, Kis-Value, 2007.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05.

Buchanan, J. and Wagner, R.,"Dialogues concerning fiscal religion,"*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77.
Buchanan, J. and Wagner, R., *Democracy in deficit,*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Engle, R. and C. Granger,"Cointeration and Error-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Econometrica* 55, 1987.
Engle, R. and C. Granger, and B.S. Yoo,"Forecasting and testing in cointegrated system,"*Journal of Econometrics* 35, 1987.
Hall, R. and D. Jorgenson,"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American Economic Review* 57, 1967.
Hoshi, T., Kashyap, A. and Scharfstein, D.,"Corporate Structure, Liquidity, and Investment: Evidence from Japanese Panel Data,"*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1991.
Devereux, Michael P. and Rachel Griffith,"Taxes and the Location of Production: Evidence from a Panel of U. S.

Multinationals,"*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8, 1998.

Devereux, Michael P. and Rachel Griffith and A. Klemm, "Why Has UK Corporation Tax Raised So Much Revenu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04.

Friedman, M.,"The Limitation of Tax Limitation,"*Policy review: summer,* 1978.

Gravelle, Jane and Kotlikoff, Lawrence,"The incidence and efficiency costs of corporate taxation when corporate and noncorporate firms produce the same good,"*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7, 1989.

Johansen, S.,"Statistical Analysis of Cointegration Vectors,"*Journal of Dynamics and Control*, Vol. 12, 1988.

Mendoza, E. G.,"Effective Tax Rates in Macroeconomics: Cross-Country Estimates of Tax Rates on Factor Incomes and Consumption,"NBER Working Paper 4864, 1994.

Nadaraya, E. A.,"On Estimating Regression,"*Theory of Probability and its Applications*, Vol. 9, No. 1, 1964.

OECD, Tax Database, 2007

Phillips, P. and P. Perron,"Testing for a unit root in time series regression,"Working Paper,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1986.

Phillips, P.,"Unit Root Test,"*Encyclopaedia of Statistical Science*, 1997.

Zimmerman, J. L.,"Taxes and Firm Size,"*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5(August), 1983.

<국문요약>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김 우 철

본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법인세수의 변동요인에 대해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법인세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개별 기업 차원의 평균 유효세율과 기업 소득을 비롯하여 전체 법인 수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기업규모 차이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의 비대칭성 문제는 기업소득 변이함수의 추정과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일정하거나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기업의 소득은 부채비율 하락에 힘입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를 분석한 경상이익률 변이함수의 추정에서는 우량기업의 높은 경상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기업의 소득 증가 외에 전체 기업 수의 증가 및 상위 100대 기업의 실적 향상도 법인세수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법인세수가 67% 증가하는 동안 개별 기업당 법인세 납부액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법인의 수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전체 법인세수가 8조 4천억원 증가하는 동안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은 8조 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위

100대 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f the Changes in the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Woo Cheol Kim

This paper investigates why the Korean corporation tax has recently raised so much revenue. We examine three economic factors that can affect the corporate income tax(CIT) revenue; including the effective tax rate, profitability, and the total number of firms. Also, to understand the how the CIT revenue depends on the asymmetric performance of different firms, we analyse persistence of firms' profitability as well as the performance of the 100 biggest firms.

Our main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CIT revenue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higher profitability of firms due to the outstanding decreases of firms' debts, rather than the increase in the tax burden of firms(which actually has slightly decreased since the economic crisis). From estimating the transition function of corporate incomes, it turns out that the level(not the relative order) of firms' profitability has become more persistent since the economic crisis. While the tax-payment per firm was stable during the period of 2000 through 2005, the growth rate of the whole CIT revenue(67%) might well be explained by the growth rate of the number of firms(68%),

implying the important role of the number of firms in the CIT revenue. However, from the comparison of the increase in the tax payments of the 100 biggest firms(₩8,630bil.) to the increase in the whole CIT revenue(₩8,467bil.), it is inferred that the higher profitability of the 100 biggest firms explains most of the increase in the whole CIT revenue.

KIPF

<著者略歷>

김우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Yal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研究報告書 07-08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2007년 12월 22일 인쇄
2007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김우철
발행인 황성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 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76-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